



해상풍력발전의 주민참여와 합의형성

2019 07 11

KEI 조공장 선임연구위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Korea Environment Institute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질문

自問 1) 환경영향평가는 협의를 위한 것인가?

自問 2) 환경영향평가는 공학/이학적 기술수법인가?

自問 3) 평가서초안만이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것인가?

自問 4) 국책사업은 왜 부동의 되지 않는가?

自問 5) 승인기관은 무엇을 하는가?

自問 6) 계획가는 환경적 고려를 언제 시작하는가?

-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고 제도에 대한 해석도 다름
- 이제 환경영향평가 그 자체를 돌이켜보자 !

EIA에 대한 오해

사업자

기준만 통과하면 된다. 의례적인 것이다.
환경만 배려하자는 거냐?
반대파(주민)은 뭘 해도 반대한다

주민

영향 없는 사업은 없다. 꼬투리 잡자.
영향평가를 사업 반대의 수단으로 인식.
필요성, 경제성도 평가하자.(과대평가),
영향평가는 하나마나다. 어차피 통과될 건데...

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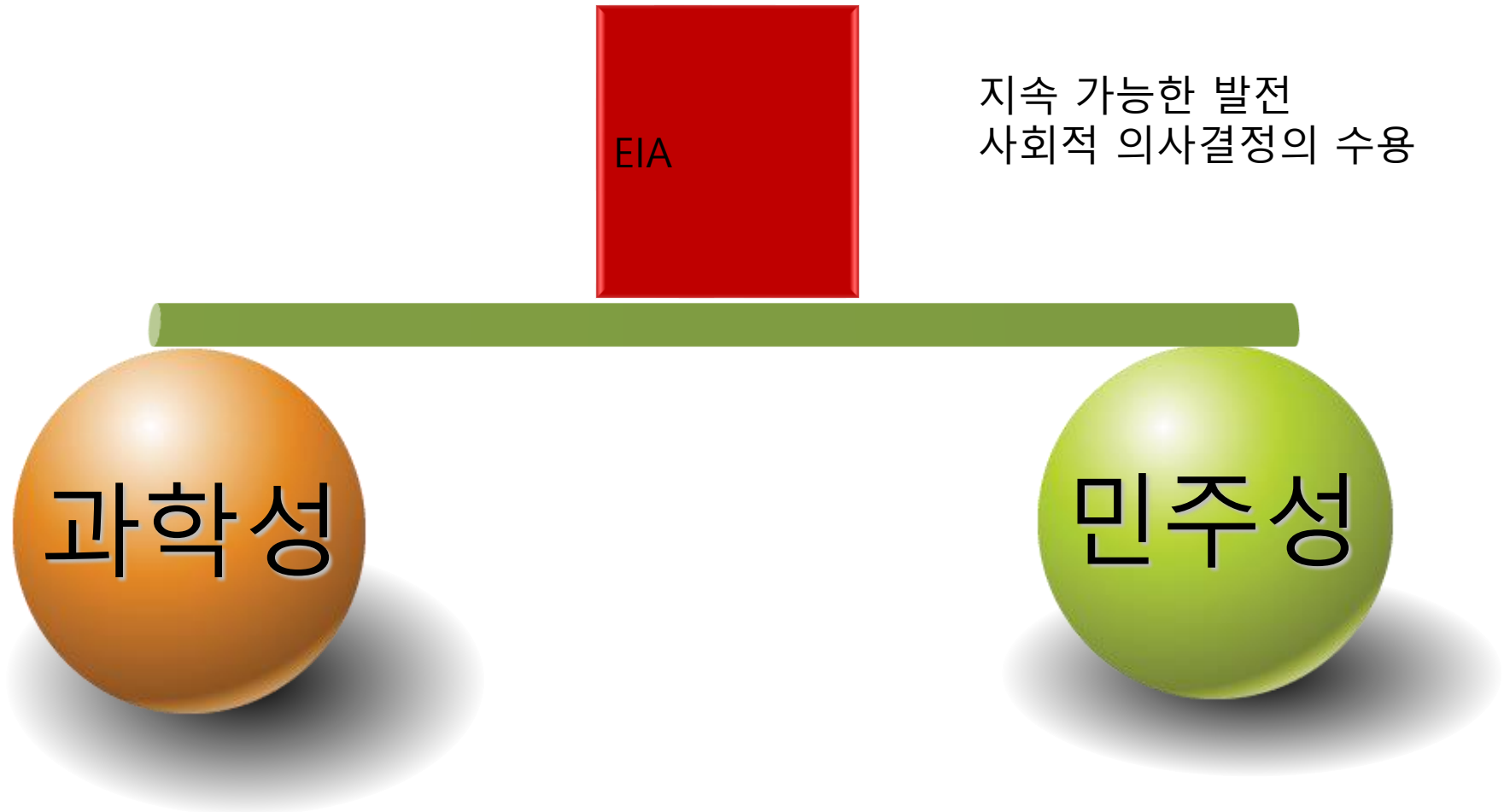
(사업추진 부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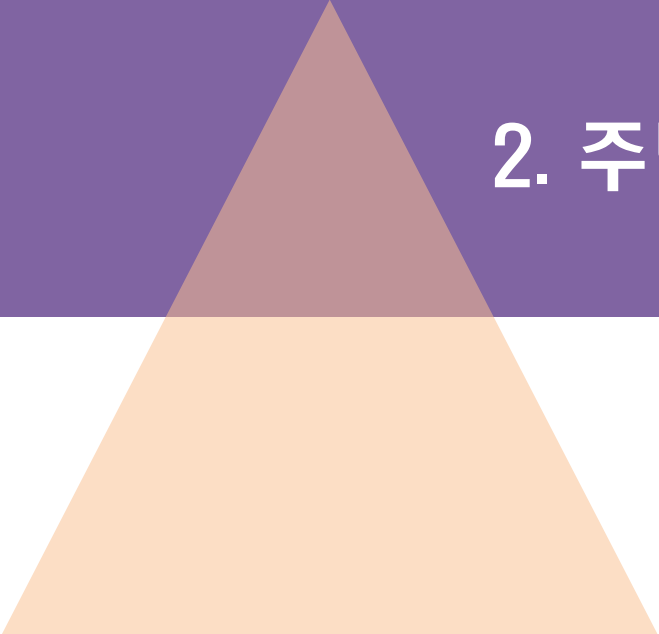
기준이 넘지 않으면 허가해야 된다
계획변경에 대한 실무자의 책임문제

(환경부)

환경부처는 힘이 없다.
환경부처는 힘이 너무 세다

재해석 2 환경평가는 과학성·민주성을 갖추어야





2. 주민참여 현황 및 과제

광양 목질계 바이오매스 발전소 공청회 '연이은 파행'...주민들 단상점거

나현범 기자 | 기사승인 2017. 10. 18. 16:53



17일 광양 황금산단 목질계화력발전소(바이오매스) 환경영향평가 주민공청회가 지역주민들의 단상 점거로 무산됐다./나현범 기자

출처: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71018010006287>

2.1 환경영향평가와 주민참여 규정

설명회 관련 규정

운영주체

- 전략환경영향평가 :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
- 환경영향평가 : 사업자

개최 시기

- 초안 공람기간(전략 20~40일, 환경영향평가 20~60일) 내에 개최

개최 장소

- 대상지역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시군구에서 개최
- 다만, 각각의 장과 협의한 경우 하나의 시군구에서 개최 가능

개최 공고

- 개최 7일전까지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

설명회 생략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이 경우 설명회에 준하는 방법으로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함

- 주민 반발 등의 사항으로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우리나라 제도만의 특징이기도 함**
- 주민이 반대하는 경우에 더더욱 주민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 **규정을 철폐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예외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공청회 관련 규정

운영주체

- 전략환경영향평가 :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
- 환경영향평가 : 사업자

개최 요건

-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
- 필요하다는 주민이 5명 이상이고, 초안에 대한 의견 제출 주민이 총수의 50% 이상

주재자

- 전략환경영향평가 :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정함
- 환경영향평가 : 사업자가 주관시장 및 군수, 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함

개최 공고

- 개최하기 14일 전까지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

개최결과 통지

- 끝난 후 7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함

1) 설명회 및 공청회의 운영주체

현황

- 목적과 개념차이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음
- 추가 논의를 위한 공청회를 하더라도 사업자가 주관
- 설명회와 공청회의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인가?

“평가서 작성 주체가 다양한 주민의 의견 수렴”

설명회

의무사항

주민만 참석 가능

공청회

선택사항

주민이 추천한 전문가

주민 측
전문가



“찬반토

사업자 측
전문가



의견 수렴
자

의견 대립 지
속

2) 공청회 운영방식의 개선

현황

- 서로의 주장만 펼치는 비효율적 토론
- 주재자의 역량 부족

공청회는 **레프리**가 필요하다!!

- 서로의 주장만 내세우다 성과 없이 끝나는 비효율적 토론
- 서로의 견해차이의 정리 · 조정되는 경우도 거의 없음

서로의 주장을
되풀이하는 과정

공청회 운영방식과
서로의 언행을 문제 삼기

공청회 진행 불가능

공청회는 **갈등 증폭의 장**이다

- 의견진술자 간의 언쟁을 조정하기 어려운 경우
- 주재자의 편파적 · 비효율적 진행
- 주재자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이해 부족**

주민 측

본안 작성 후
추가 설명회 개최

주재자

환경영향평가법을
이유로 **거절**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이해 부족



환경영향평가법

- ✓ "초안 때는 반드시 설명회 개최"
- ✓ 추가 설명회 **개최 금지** 규정 없음

3) 설명회의 답변자

현황

- 평가대행업체에서 답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 사업자측 참석자는 부장, 과장급. 사장이 나오는 경우는 ?

설명회의 바람직한 답변자

주민의 요청에 대한 **대안검토**를 **약속**할 수 있는 주체

환경공학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부분

답변자

평가대행업체

예산의 증가가 수반
되는 계획대안의
검토, 보상, 이주대책

답변 불가

예산 관련 부분

답변자

사업자

부장, 과장급

경우에 따라 임원 참석

계획변경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기 힘들다!!

왜?

사업자 측 설명회의 주요 목적
"사업내용 및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에 대한 **주민 설득**"

성과지표 1. 시나리오 워크숍 효율성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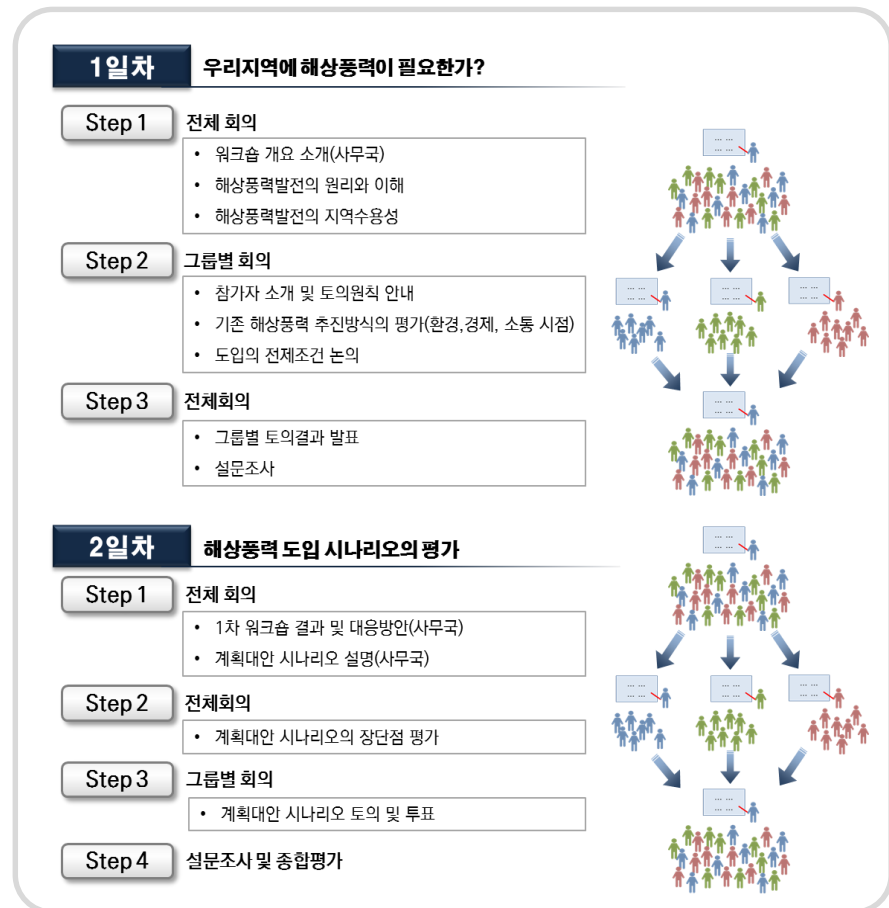
■ 워크숍 목적

- ✓ 계획입지 단계에서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한 주민참여 기법으로써 “시나리오 워크숍”유효성 평가

기존의 주민참여 한계점	제안 방법론
1 계획대안의 검토가 불가능	1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안(No Action)을 포함하여 다양한 계획대안을 검토
2 소통의 방식이 일방적	2 주민상호간 속의적 대화 를 할 수 있는 워크숍 기법을 활용
3 환경적 영향 이외의 경제·사회적 영향에 대한 의견 개진어려움	3 환경적 영향과 동시에 경제·사회적 영향을 종합 평가

■ 운영 방법

- ✓ 주제
 - 1차(2018.09.05) : 기존 사업계획 및 추진방식 평가
 - 2차(2018.09.19) : 해상풍력 도입 시나리오 평가
- ✓ 참여자 및 평가자 : 고창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20여명
- ✓ 장소 : 고창 하전어촌계 회의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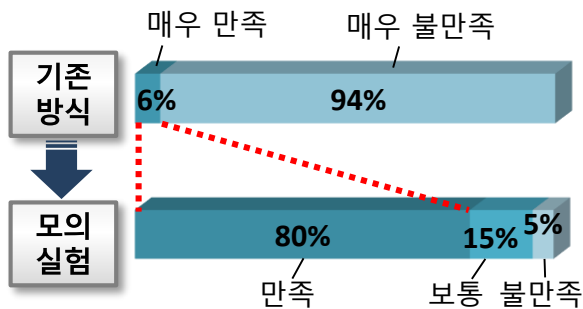


〈 시나리오 워크숍 프로그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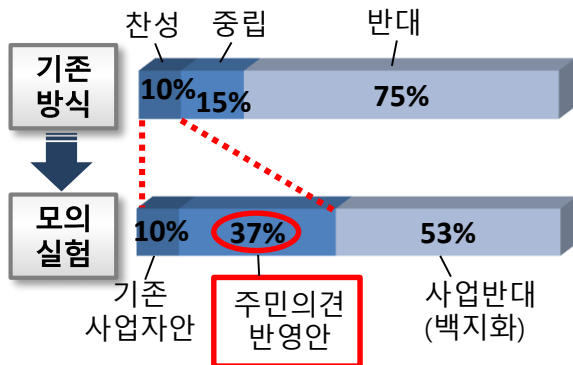
성과지표 1. 시나리오 워크숍 효율성 검증

■ 운영 결과

1) 주민참여(소통) 방식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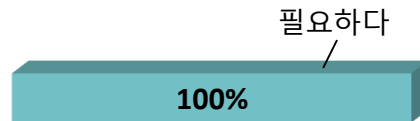


2) 계획대안 만족도



3) 제도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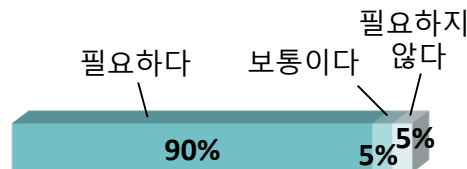
✓ 계획입지제도에서 주민참여 의무화



✓ 지역상생계획, 소통계획 제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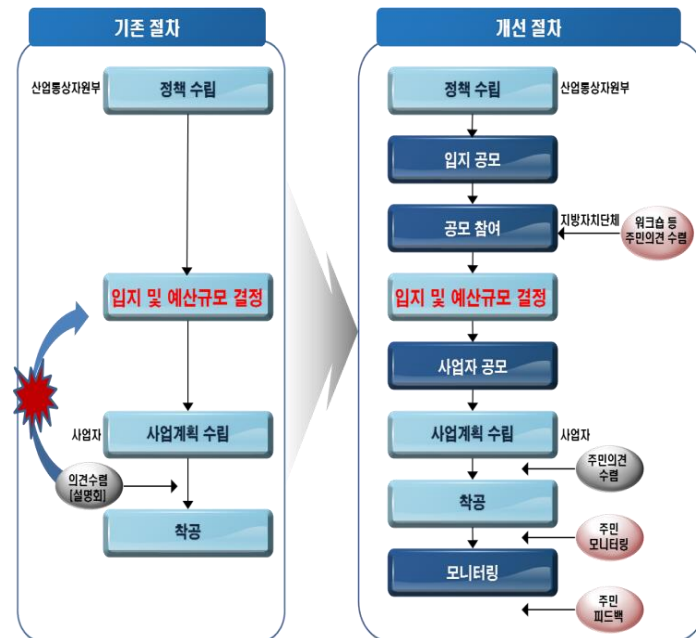


✓ 계획입지단계에서 복수대안 제도화



■ 제도 개선사항

1. 계획입지 단계에서 **주민참여 절차 의무화**
2. 주민참여 기법으로 **시나리오 워크숍** 방식 권장
3. 사업계획에 **시설계획 + 소통계획 + 지역상생계획** 포함
4. **복수대안** 비교검토 의무화 (No Action 포함)



CONTENTS



해상풍력발전의 사회적 수용성



시나리오 워크숍 설계



모의실험 결과



정책제언



해상풍력발전의 사회적 수용성

1.1 육상풍력발전의 갈등사례



자료: KBS(2015.07.12), 친환경 풍력발전의 역습



(2016.10.09), 풍력발전 업체, 소음 없다더니...500m 거리인데 잠 못 잔

환경문제



자료: SBS(2013.12.09), 독수리가 풍력발전기에 치여 희생...친환경의 그늘

- ▶ 설치 장소의 한계
 - 목표달성(신재생에너지 비율 20%)을 위해 제주도의 1.6배 (2975km²) 면적 필요
- ▶ 소음과 진동, 저주파 등 보이지 않는 피해
 - 수면방해, 스트레스 유발, 항공 장애, 그림자 피해 등
- ▶ 시각적인 위압감
 - 스카이라인 훼손, 경관 부조화
- ▶ 생태계 피해 우려
 - 야생동물 출몰, 시설물과 조류 충돌

소음 피해 사례

풍력발전 인근 주민 '못살겠다'...피해사실 공식 확인

[2016년 4월 8일 / 제68호] 영암·신안군 포함 15개 마을 조사...두통·귀울림 호소 / 전남도, 추가조사 검토... 환경기준 제도정비 마련 시급

정정안 기자 | 승인 2016.10.12 | 수정 2016.10.12 17:55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풍력발전 인근 지역 주민들이 실제로 수면장애와 어지럼증 건강문제 높게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 통합건강 증진사업 지원단이 지난 2월29일부터 3월 23일까지 의학 전문가 등 25명을 동원, 풍력 발전소 인근의 영암 11개 마을과 신안 4개 마을 가구당 1명씩 모두 399명을 조사 대상으로 주민 건강 실태조사를 한 결과 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은 수면 장애와 이명, 어지럼증 등 비 인근 지역 주민에 비해 건강문제를 높게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이 나타난 증세는 어지럼증으로, 조사대상 주민의 36.8%인 147명이 이를 호소했다. 이어 두통 143명(35.8%), 마음불안 126명(31.6%), 귀울림 113명(28.3%) 순이었다. 가슴이나 배의 압박감을 호소하는 주민도 78명(19.5%)이었다.

자료: 영암우리신문(2016.10.12)

산림 훼손 사례

무분별한 풍력발전사업 곳자왈 명는다

한국중부발전(주) 추진 상명지구 수목 잘리고 훼손 심각
'주변환경 악영향 저감책 시행' 협의내용도 불이행 지적

고영진 기자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입력 2015-04-14 (화) 19:16:17 / 승인 2015-04-14 (화) 19:17:30 / 최종수정 2015-04-14 (화) 21:01:59



▲ 한국중부발전(주)이 추진 중인 상명 육상풍력 발전사업으로 인해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곳자왈 지역이 훼손되고 있다. 사진은 14일 지질조사 차량이 곳자왈 지역에서 작업하고 있는 모습.

생태계 보고이자 제주의 허파인 곳자왈이 풍력발전사업으로 인해 무분별하게 훼손되고 있다.

14일 상명 육상풍력 발전사업 지구인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곳자왈 지역.

자료: 제민일보(2015.04.14)

1.2 해상풍력발전의 갈등사례



사회 수용성 문제

자료: 전라일보(2016.03.21), 부안 해상풍력단지 개발 논란

경남일보(2017.08.09), 탈원전 뒤 전기료 인상은...230% vs 10.6%



자료: 한겨레(2017.06.30), 해상풍력, 왜 제주에선 되고 다른 지역에선 안 됐나

- 어민의 생존권 침해
 - 어족자원 감소, 어업구역 축소 등
-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소통 부재
 - 어민과의 소통 부재, 보상금 지원대상 주민 지정 문제
-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 평가대행자 중 수산 전문가 배제, 정확한 피해조사 요구
- 국책사업에 대한 불신
 - 과거 유사 선행 경험에 의한 불신 형성

제주 대정풍력발전 사례

사회

모슬포어선주협회 · 수산경영인 대정분회 "해상 풍력발전 반대"

데스크출인 2013.01.28 11:43:42

고영태 기자 | sisajeju@sisajeju.com



제주 서귀포시 대정지역 어업인들이 대정해상 풍력발전시설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모슬포어선주협회와 한국수산경영인 서귀포시연합회 대정분회는 28일 기자회견을 갖고 "어업인 생존권과 생명권을 박탈하는 대정해상풍력발전 시설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모슬포어선주협회와 한국수산경영인 서귀포시연합회 대정분회를 비롯한 2개 단체는 지난 2012년 12월 20일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을 반대하는 청원을 제주도의회에 접수했다.

이날 대정지역 어업인들은 "오는 2월 18일 도의회가 개원되면 이 청원이 심의될 예정이지만 제주도와 한 국남부발전은 연합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듯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공람과 설명회를 서두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올해 5월 중 무슨일이 있더라도 착공하려는 의도이고 2월 18일 개원되는 도의회 의원들의 예공을 피해가려는 꼼수"라고 비난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살펴보면 사업추진을 위한 요식 절차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 시사제주(2013.01.28)

서남해 해상풍력발전 사례

"서남해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 반대"

승인 2018.03.23 19:11 신문 2996호(2018.03.27) 7면



▲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건설을 반대하는 어업인들이 지난 20일 전북도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있다.

수협·어민, 전북도청서 집회

조업구역 축소로 직접적 피해

전자기장 생태계 교란 등 우려

해양환경 피해조사 연구 추진

수협이 해상풍력발전소 확대에 따른 어민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지역별 대책위원회 구성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자료: 한국농어민신문(2018.03.23)

1.3 주민간담회 결과(갈등원인은?)



★ 괄호는 (발언주체)를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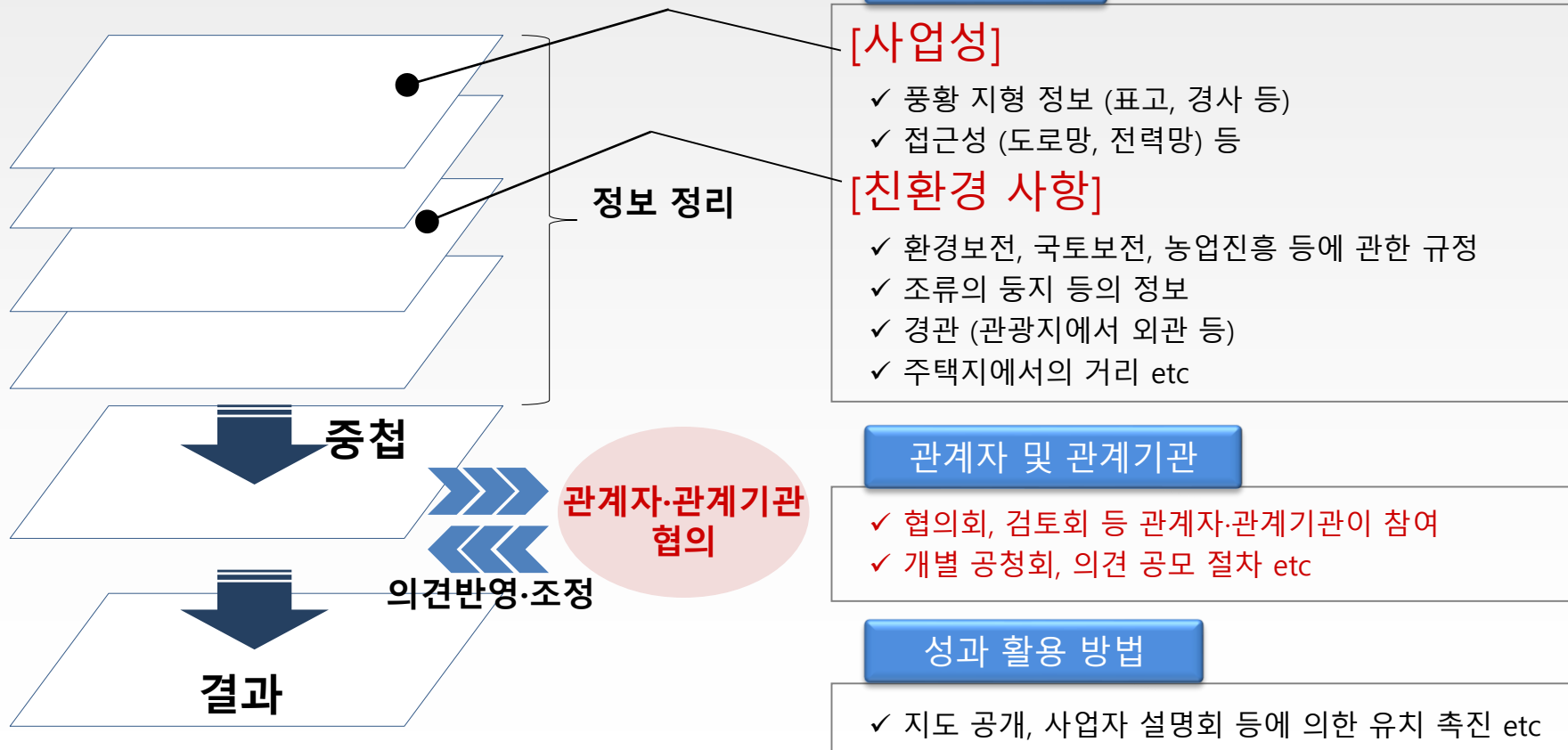


자료: 서남해 해상풍력 이해관계자 인터뷰 결과(2017년도)

1.4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도

❖ 일본의 해상풍력발전 입지 선정 (중앙정부 vs. 지자체 vs. 사업자 역할)

- 환경성이 복수의 후보지역에 대한 환경조사를 사전에 실시
- 지자체가 민간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



❖ 개정 법률안(2017.12.27 발의, 현재 계류중)

제안이유

- 재생에너지발전지구의 지정 및 개발,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

주요내용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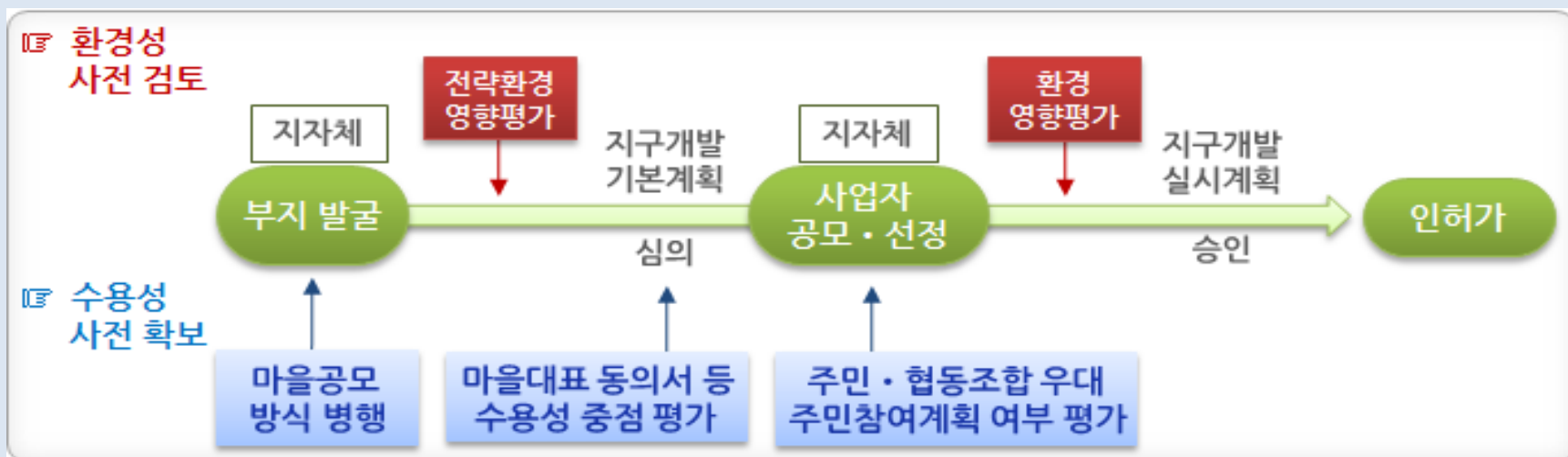
- 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이격 거리를 설정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우선하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다. 재생에너지발전지구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할 재생에너지발전지구 심의위원회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설함
- 라. **재생에너지발전지구의 지정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비계획적이고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통수용성 등을 확보하여 효과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재생에너지발전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 ✓ 갈등 요인이 되는 환경조사는 누가 하고, 주민 수용성 조사는 누가 하는가?
- ✓ 공모제 도입으로 책임을 지자체장에게 미루는 것 아닌가?
- ✓ 지자체는 무엇을 해야하는가? 예산/인력이 있는가?

❖ 환경부가 말하는 계획입지제도 → 제도화 되지 않음

- 수용성 및 환경성은 사전 확보하고, 개발이익은 공유하도록 재생에너지 입지 절차 개선
- (절차) 광역지자체가 부지발굴 → (중앙정부 승인) → 민간사업자에 부지 공급
→ 민간사업자가 지구개발 실시계획 수립 → (중앙정부 승인 / 인허가 의제처리)
- (수용성 제고) 마을공모 방식 도입, 계획 심의 시 주민수용성 중점평가 등의 장치 마련
- (환경성 검토) 지구개발 기본 / 실시계획 심의 전 전략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 실시 의무화
- (지역사회 기여) 개발이익 공유(사업자 → 지자체), 지역지원사업 등 기여방안 마련

계획입지제 절차도(안)



자료: 환경부 보도자료(2018.03.15), "육상풍력사업 환경성, 주민수용성을 높여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기여와 지역갈등 예방"



시나리오 워크숍 설계

2.1 개발계획 프로세스와 환경평가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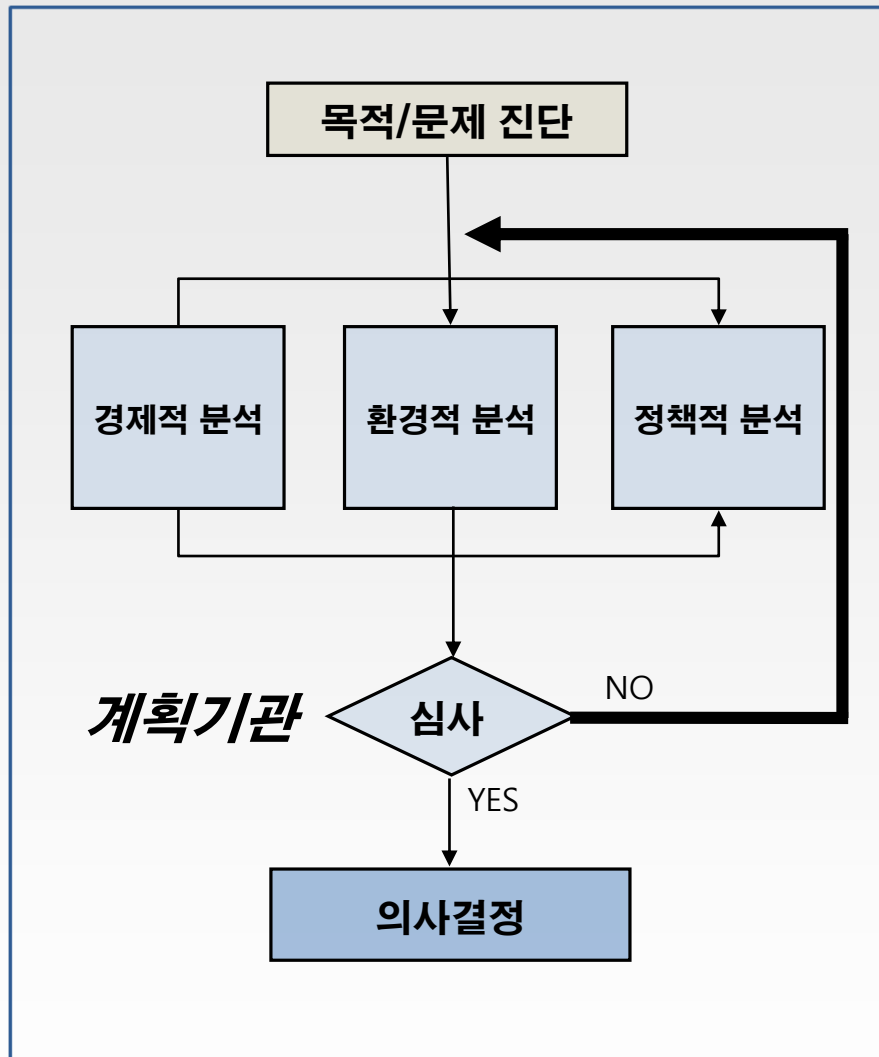
- 본 연구에서는 경제분야에서 시행하는 **예비타당성조사**와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계획입지제도**를 사업의 구상단계에 도입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시나리오 워크숍** 방법의 효율성을 검증하고자 함

❖ 갈등관리는 초기에 시작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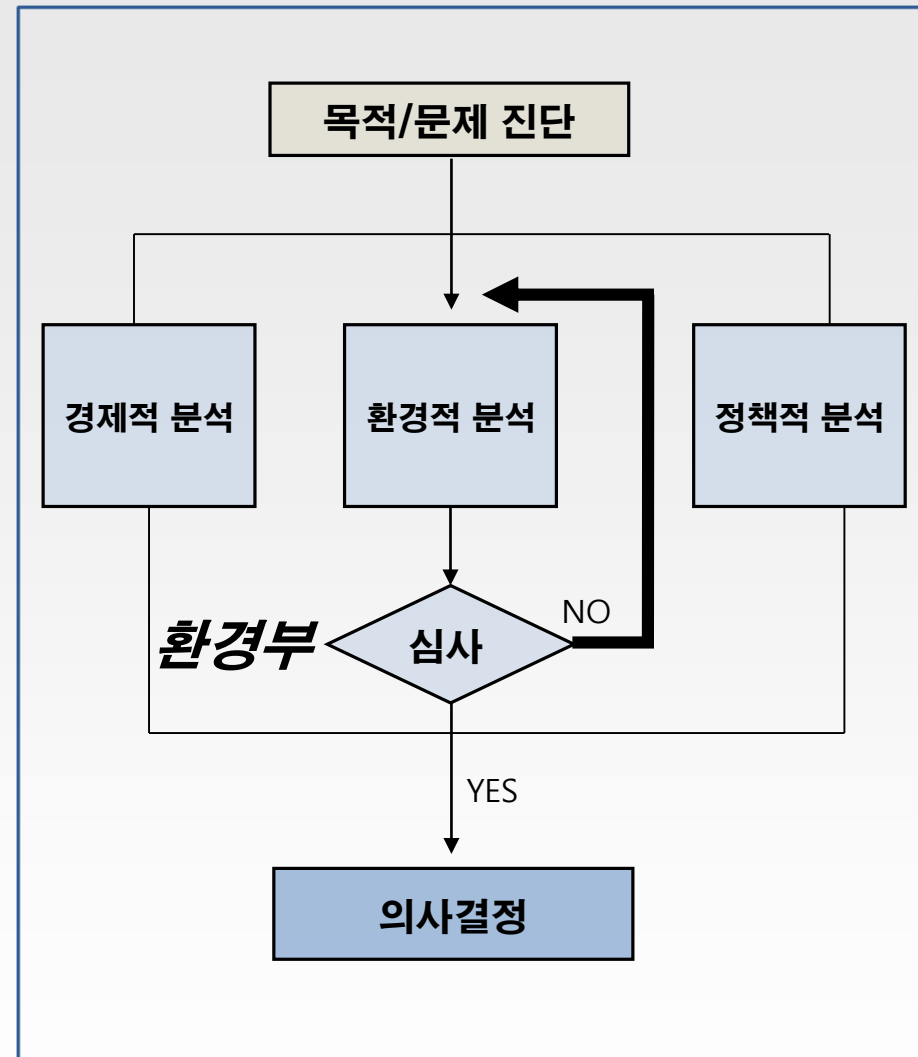
- 대규모 개발 사업의 구상단계에서부터 지역 사회 및 지역주민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함

	환 경	경 제	사 회
구상 단계		예비타당성조사	X
기본 설계	전략환경영향평가 (SEA)		X
실시 설계	환경영향평가 (EIA)		X
공사시	사후환경영향조사		X
운영시	사후환경영향조사		X

환경평가가 늦다. 사회평가는 없다



전략환경평가



환경영향평가

2.2 시나리오 워크숍 개요

❖ 시나리오 워크숍이란

- 미래의 기술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한 비전과 제안을 개발할 목적으로 지역 주체들과의 다양한 토론을 포함하는 회의
- 시나리오 워크숍은 전문적, 지역적인 통찰력의 교환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기술의 평가와 선택을 수반하는 광범위하고 학제적이며, 사회지향적인 주제에 가장 적합

❖ 본 모의실험의 목적

- 계획입지 단계에서의 사회적 수용성 검토를 위한 이해관계자 소통의 장으로써의 “시나리오 워크숍” 유효성 평가
- 기존의 설명회 및 공청회 방식의 개선(소통방식의 개선) 방안 마련



2.3 프로그램

사전준비

- 해상풍력 국·내외사례
- 해상풍력 사업계획 (환경·사회영향, 지역상생계획 포함)
- 1차 설문조사 질문지

사전준비

- 1차 워크숍 결과 정리
- 대안 시나리오 작성
- 2차 설문조사 질문지

1일차

우리지역에 해상풍력이 필요한가?

Step 1

전체 회의

- 워크숍 개요 소개(사무국)
- 해상풍력발전의 원리와 이해
- 해상풍력발전의 지역수용성

Step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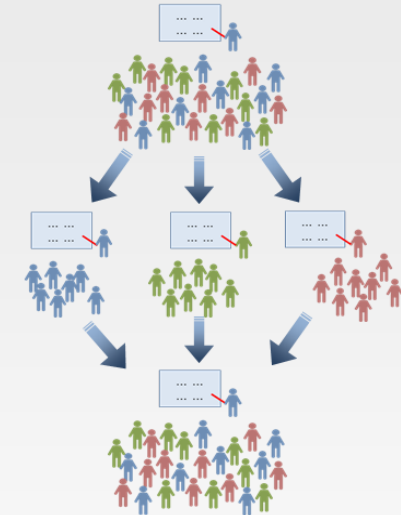
그룹별 회의

- 참가자 소개 및 토의원칙 안내
- 기존 해상풍력 추진방식의 평가(환경,경제, 소통 시점)
- 도입의 전제조건 논의

Step 3

전체회의

- 그룹별 토의결과 발표
- 설문조사



2일차

해상풍력 도입 시나리오의 평가

Step 1

전체 회의

- 1차 워크숍 결과 및 대응방안(사무국)
- 계획대안 시나리오 설명(사무국)

Step 2

전체회의

- 계획대안 시나리오의 장단점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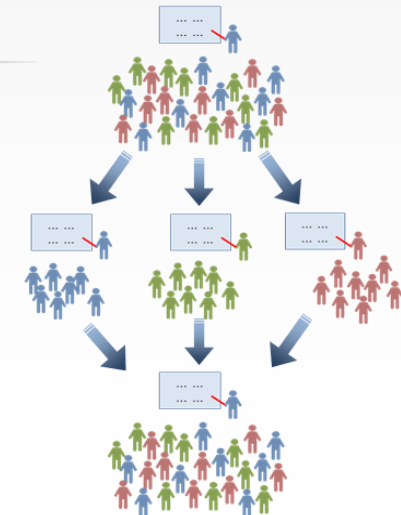
Step 3

그룹별 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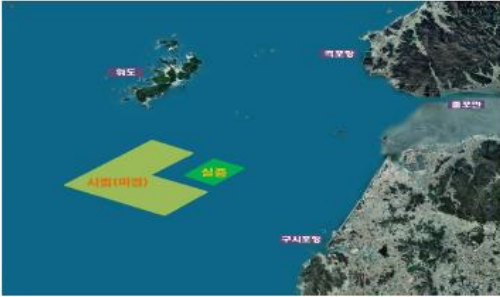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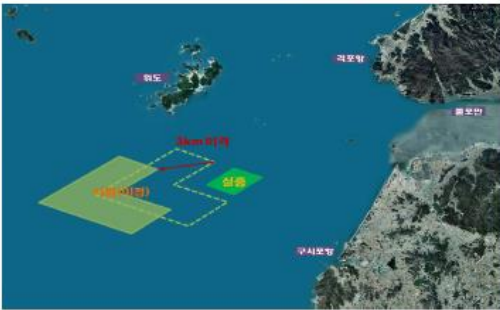
- 계획대안 시나리오 토의 및 투표

Step 4

설문조사 및 종합평가



2.4 대안 검토

		개요	환경저감방안	상생계획	소통계획
계획 1 안		〈현행계획〉 - 규모: 400 MW - 실증단지와의 이격거리: 0km - 사업추진기간 : 2020~2024년	기존안	기존안	기존안
계획 2 안		〈주민의견 반영안〉 - 규모: 400 MW - 실증단지와의 이격거리: 3km - 사업추진기간 : 2022~2026년	- 시범사업의 철저한 사후조사 후 계획수립 - 사후조사에 주민 및 주민추천 전문가 참여 - 주민참여형 환경영향평가 실시 - 환경모니터링 협의체 구성 및 상설 운영	- 새로운 피해 발생 시 추가 보상 협약 - 실질적인 지역상생방안 마련(이익공유제 등) - 주민에게 구체적인 혜택 (지역상생기금 관리위원회 구성 및 주민대표 참여)	- 주민대표 및 각 직군대표, 전라북도, 고창군, 산자부, 환경부, 해수부, 사업자가 모이는 원탁회의 구성 (정부관계자는 국장급 이상) - 원탁회의에서 모든 정보관리 및 소통(기록작성) - 워크숍, 간담회 등 적극적인 쌍방향 소통
계획 3 안		〈사업백지화 안 1〉 고창 신규사업 중지 (부안, 영광에서 신규사업 공모 신청)	고창 신규사업 중지 (실증단지는 완료, 부안·영광에서 신규사업 공모 신청)	없음	없음
계획 4 안		〈사업백지화 안 2〉 서남해안 어느 곳에도 해상풍력발전을 유치하지 않음	-	-	-



모의실험 결과

1.2 워크숍 프로그램

1일차

- 일시 : 2018.09.05(수) 오전 10시~12시
- 장소 : 고창 하전어촌계 회의실

시 간

내 용

※ 주제 : 우리지역에 해상풍력이 필요한가?

[전체 회의]

1. 워크숍 개요 소개(사무국)
2. 해상풍력발전의 원리와 이해
(전인성 전력연구원 부장)
3. 해상풍력발전의 지역수용성
(조공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사)

[그룹별 회의]

1. 참가자 소개 및 토의원칙 안내
2. 기존 해상풍력 추진방식의 평가
(환경, 경제, 소통적 시점)
3. 도입의 전제조건 논의

[전체회의]

1. 그룹별 토의결과 발표
2. 설문조사

2일차

- 일시 : 2018.09.19(수) 오전 10시~12시
- 장소 : 고창 하전어촌계 회의실

시 간

내 용

※ 주제 : 해상풍력 도입 시나리오의 평가

[전체 회의]

- 1차 워크숍 결과 및 대응방안(사무국)
- 계획대안 시나리오 설명(사무국)

[전체 회의]

- 계획대안 시나리오의 장단점 평가

[그룹별 회의]

- 계획대안 시나리오 토의 및 투표

[전체회의]

- 설문조사 및 종합평가

1.4 역할자별 분담사항

참여자

- 각자 하고 싶은 말을 포스트잇에 간단히 작성
- 포스트잇에는 하나의 의견만 작성
- 순서대로 하나씩 의견 개진
- 다른 사람 발언에 비슷한 의견이 있으면 제출
- 다른 사람의 의견에 반대나 비판은 불가.
반대 의견은 새로운 의견카드로 제시

퍼실리테이터

- 참석자의 의견 정리
- 의견이 명확하지 않으면 추가질문
- 퍼실리테이터의 입장 주장 불가
- 참석자에게 토의 목적을 지속적으로 주지
- 논의가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유도

서기

- 의견 포스트잇 정리
- 의견 포스트잇 그룹화 및 소제목 작성

관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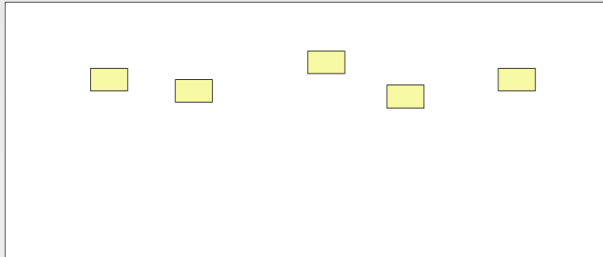
- 자유롭게 관찰
- 가능하면 하나의 그룹을 관찰

3.1 워크숍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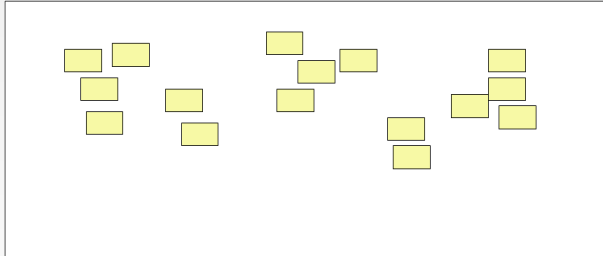


❖ 카드 브레인 스토밍 기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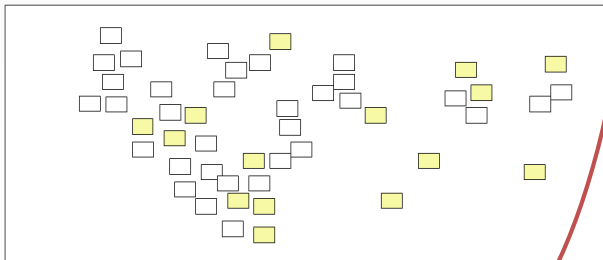
<의견카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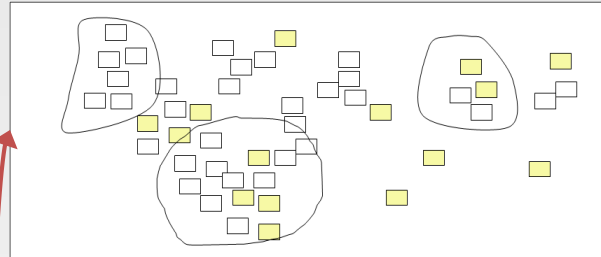
<의견카드에 대한 유사의견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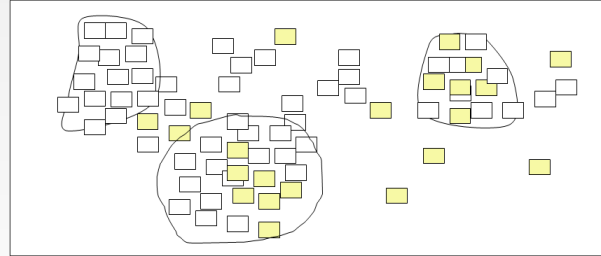
<새로운 의견 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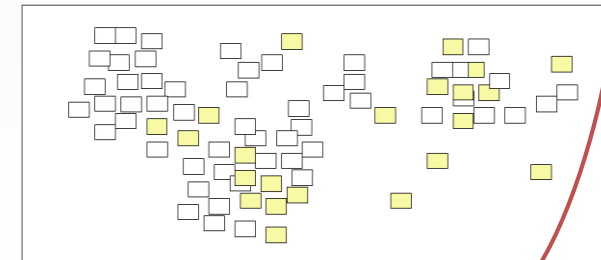
<중요 이슈군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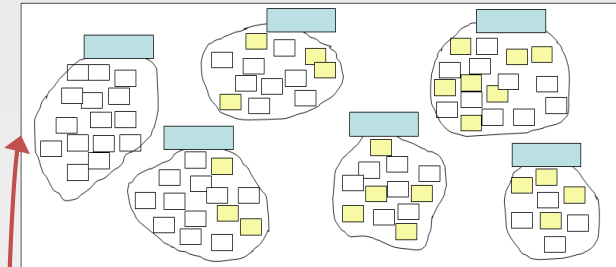
<중요 이슈군 의견 토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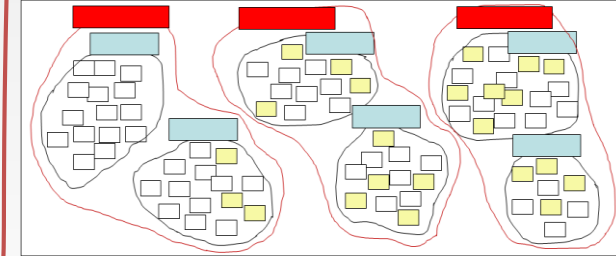
<워크숍 결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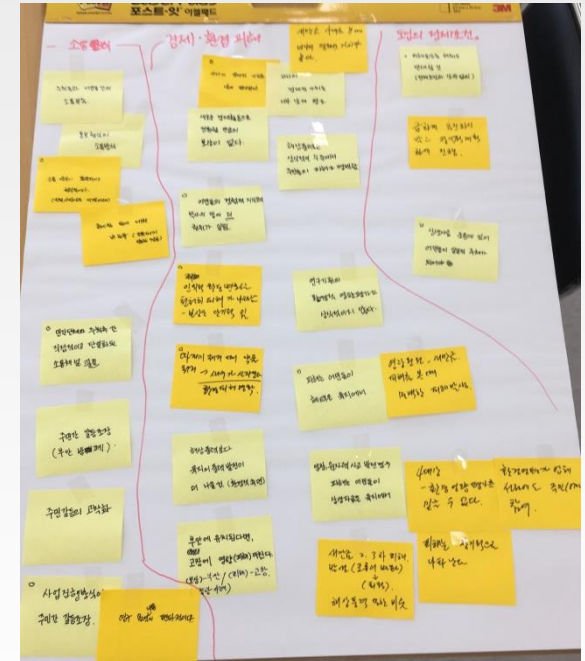


<카드 분류 및 제목 작성>



<그룹화(클러스터링)>





2.1 워크숍 결과(1일차)

① 환경적 측면

키워드	내 용
1. 양식산업 피해	- 조류 및 지형변화→갯벌유실→바지락유실→생태계 교란 - 양식산업 후퇴 우려(바지락, 김 등)
2. 어업활동 피해	- 항구가 좁아짐 - 꽃게(냄새)
3. 진동 및 소음, 전자파 피해 등	- 전력공급 케이블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피해 - 암반 드릴링 시 발생하는 발암물질 확인 필요
4. 피해조사 부족 (환경평가, 장기영향)	- 사업자가 환경적 피해를 인정하지 않음 - 서해안 갯벌 특징을 고려하지 않은 졸속추진(외국사례만 참조) 5~10년 후의 장기영향 확인 필요(피해입증을 위한 장기간 조사 필요)
5. 기존의 피해 경험	- 영광원전, 새만금의 경험으로 피해 발생이 명백 - 새만금으로 2, 3차 피해 발생경험(조류변화→퇴적) - 따개비 제거 때 약물 처리→새우가 사라짐 - 어민들의 경험적 지식보다 박사의 말에 권위가 더 실림

2.1 워크숍 결과(1일차)

② 경제적 측면

키워드	내 용
1. 바다와 갯벌의 가치	• 해상풍력의 가치 vs 바다, 갯벌의 가치
2. 지역경제에의 영향	• 지역경제에 도움 안됨 • 고용창출 효과 없음 • 관광업 피해 ↔ 일부는 도움될 수 있음(식당, 숙박)
3. 보상대상	• 실제 어업종사자에게 보상되지 않음 (피해는 어민들이 혜택은 육지에서(영광원전사례)) • 다른 사업(지속사업)에 수익금이 분배됨 (군내 숙원사업은 지자체 예산으로) • 정확히 피해 받는 어민에게만 보상 필요
4. 보상시기 및 기간	• 선보상, 미래보상 필요 • 인위적 활동변화가 장기간임에 반해 보상은 단기적
5. 보상금액	• 피해 = 보상 (피해 받은 만큼의 보상 필요) • 새로운 경제활동으로 전환할 만큼의 보상이 없음

2.1 워크숍 결과(1일차)

③ 소통적 측면

키워드	내 용
1. 신뢰 부족	• 환경조사에 대한 신뢰 부족 (편파적인 내용, 피대위&사업자가 수의계약으로 피해조사) • 사업의 긍정적인 면만 강조 • 문제점에 대한 비공유 (정보 비공개) • 피해조사에 주민 참여 필요 (환경영향평가 업체선정 등)
2. 소통의 시기	• 사업시행 전 소통 필요
3. 사업자의 소통방식	• 사업담당자의 잦은 변경(2년 파견) • 사업자의 입장 변경, 책임 회피 • 환경적 피해를 인정하지 않는 사업자 • 지역주민들 간 갈등 조장 (부안 방폐장 사례도)
4. 정부의 소통방식	• 정부주도형 사업방식으로 소통이 부재함 • 전원개발촉진법을 내세운 일방적 개발 • 산업통상자원부의 소통부재 • 정부의 적극적 자세 필요 (정부가 지자체 설득→지자체가 주민 설득 과정 필요) • 바다의 주인인 해양수산부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사업
5. 주민의견 수렴수단	• 주민의견 수렴 없음 • 일부 1,600여명 주민의 동의로 사업 강행 • 일방향 소통, 통보형식의 소통, 답변이 없음 • 진정성있는 대화 필요 • 지역정서 반영 필요 • 단일화된 소통채널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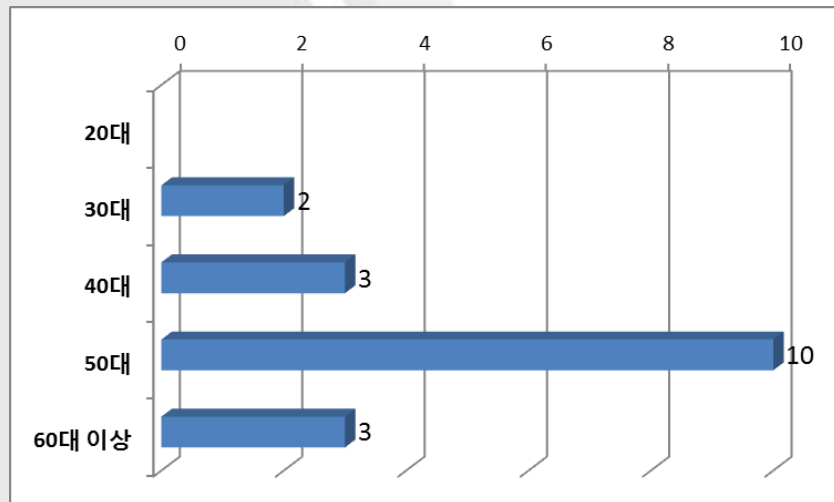
2.1 워크숍 결과(1일차)

2.1.2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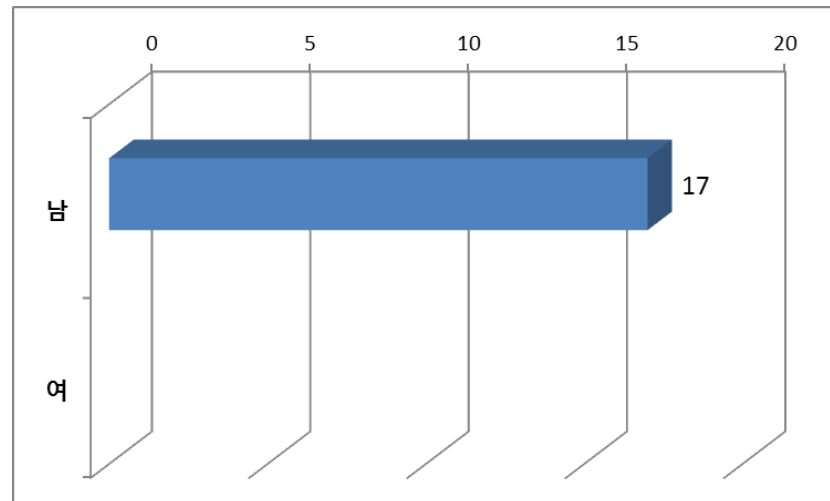
➤ 일시 : 2018.09.05(수) 오전 11시 30분

➤ 응답자 : 총 17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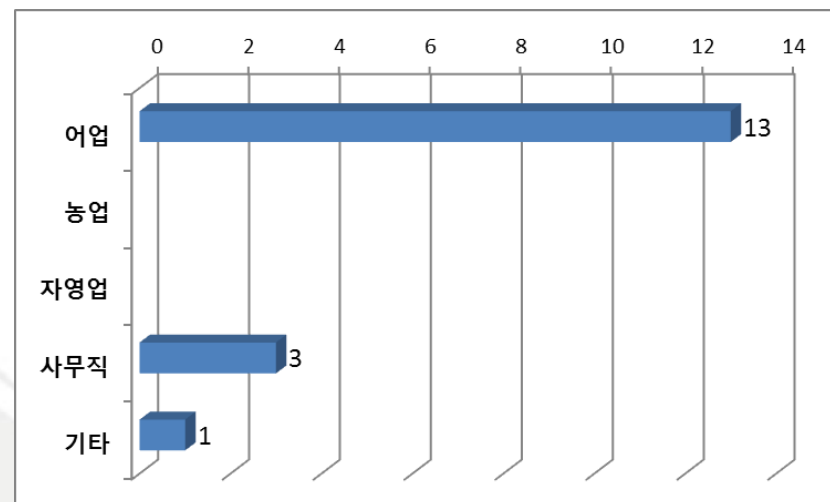
1. 귀하의 연령대는 어디에 속합니까?



2.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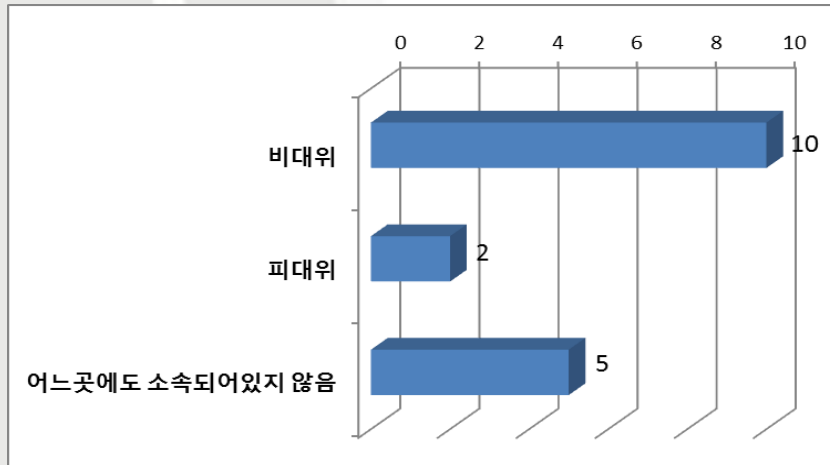


3. 귀하가 종사하는 직업은 어디에 속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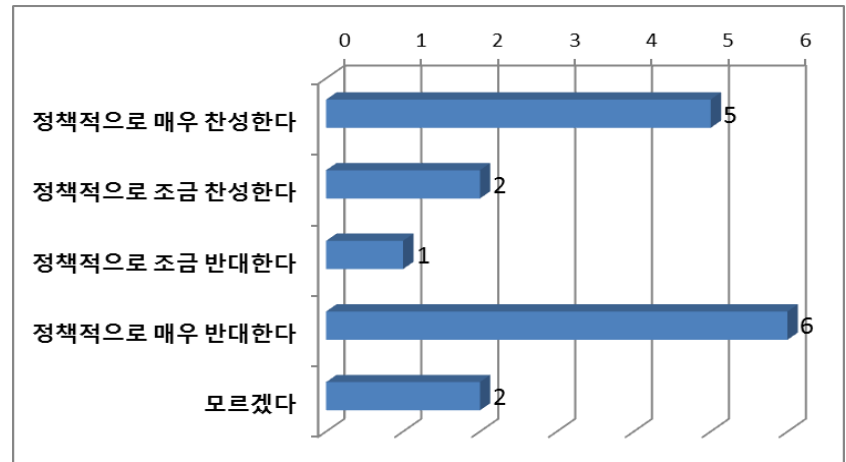


2.1 워크숍 결과(1일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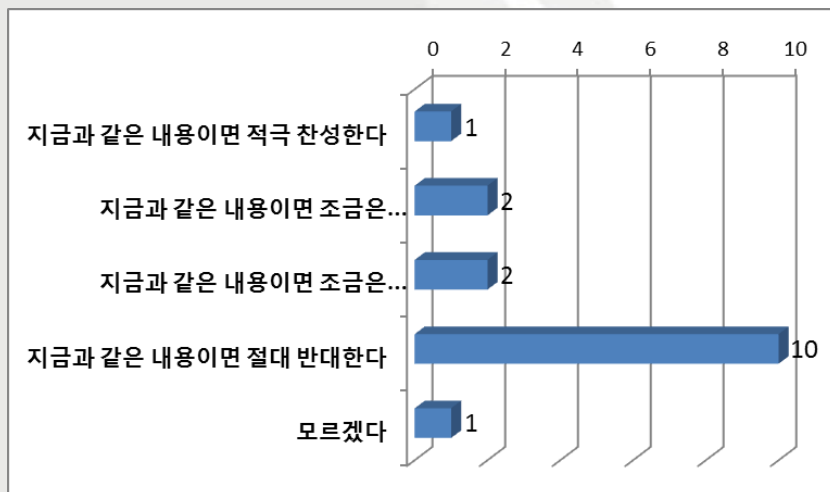
4. 귀하는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 개발사업” 과 관련하여 비상대책위원회 혹은 피해대책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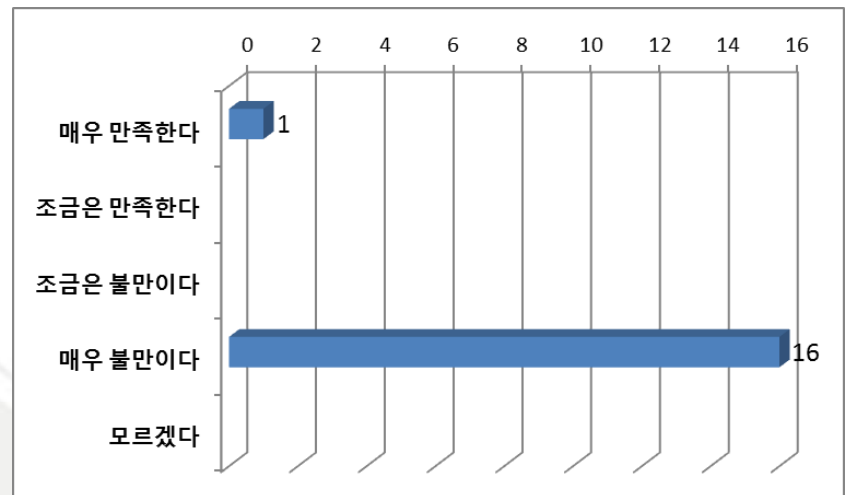
5.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자립도 확보를 위한 해상풍력 확대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 귀하의 거주지역 및 주변지역에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건설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 기존의 주민과 사업자의 소통방식에 만족하시는 편입니까?



2.1 워크숍 결과(1일차)

8. 이번 워크숍과 관련하여 좋았던 점과 향후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면 자유롭게 작성 부탁드립니다.

좋았던 점	• 늦었지만, 소통의 장이 되었다. 우리 지역에서 반대해야 할 이유를 충분히 설명했다. • 자유로운 의견 제시 • 사업 시행 전 어민들과의 대화가 많이 이루어졌으면 함 • 워크숍이 어민들의 심정이 정확히 반영될 수 있으면 함 • 이런 대화를 사전에 했으면 좋았겠다. • 조금 늦은감은 있으나 좋은 워크숍인 것 같다. • 의견 청취자세 만족하고 다음에도 기회를 많이 만들면 더욱 좋겠다. • 신선하고 진실성 있는 대화의 장이 마련되어 좋았다. • 어민들은 실증단지 시작할 때부터 이러한 대화와 토론 간절히 원했습니다. 앞으로 많은 대화 토론 부탁드립니다. • 직접 주체가 '국책사업' 진행 방식 등에 대한 방식을 고민하는 자리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임 → 주체의 참여를 통한 진행 방식의 정책적 반영 고민이 긍정적 • 소통과 의견 발표 좋았다.
개선사항	• 어떤 정책을 펴기 전 지역민 설명과 동의가 절대적으로 우선시 되어야 함. • 사업자 솔직한 설명회 • 어업인과 대화 • 토의를 통한 요구사항이 정책 의결에 반드시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 정책 혹은 입법을 통한 실질적 반영이 중요 • 지속적으로 방안을 모색해야 함(적극성 필요)

2.2 워크숍 결과(2일차)



오전 10시 장소 | 하전어촌계 회의실 주최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2 워크숍 결과(2일차)

< 시나리오 평가 >		계획 1안 (연명계획)	계획 2안 (주민의견 반영안)	계획 3안 (사업백지화 안)
환경	자체평가	• 환경피해에 대한 주민우려	• 이격거리 증가, 사업기간 조정으로 환경적 우려 감소 •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대응 가능	• 사업으로 인한 환경피해 없음 (외부지역 사업으로 인한 피해는 발생가능)
	주민의견			
	투표			
경제	자체평가	• 보상 이외의 지역상생방안 제시 부족	• 이익공유제 등 지역상생방안 마련 • 기금운영위원회를 통한 실질적 주민혜택 증가	• 주민혜택 없음
	주민의견			
	투표			
소통	자체평가	• 소통계획 부재 • 주민간 갈등 악화	• 소통계획 수립 • 원탁회의 개최	• 없음
	주민의견			
	투표			
종합	자체평가	• 사업추진에 주민 반대 심함	• 주민의견 반영하여 계획 보완	
	주민의견			
	투표			

< 시나리오 평가 >		계획 1안 (연명계획)	계획 2안 (주민의견 반영안)	계획 3안 (사업백지화 안)
환경	자체평가	• 환경피해에 대한 주민우려	• 이격거리 증가, 사업기간 조정으로 환경적 우려 감소 •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대응 가능	• 사업으로 인한 환경피해 없음 (외부지역 사업으로 인한 피해는 발생가능)
	주민의견			
	투표			
경제	자체평가	• 보상 이외의 지역상생방안 제시 부족	• 이익공유제 등 지역상생방안 마련 • 기금운영위원회를 통한 실질적 주민혜택 증가	• 주민혜택 없음
	주민의견			
	투표			
소통	자체평가	• 소통계획 부재 • 주민간 갈등 악화	• 소통계획 수립 • 원탁회의 개최	• 없음
	주민의견			
	투표			
종합	자체평가	• 사업추진에 주민 반대 심함	• 주민의견 반영하여 계획 보완	
	주민의견			
	투표			

< 시나리오 평가 >		계획 1안 (연명계획)	계획 2안 (주민의견 반영안)	계획 3안 (사업백지화 안)
환경	자체평가	• 환경피해에 대한 주민우려	• 이격거리 증가, 사업기간 조정으로 환경적 우려 감소 •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대응 가능	• 사업으로 인한 환경피해 없음 (외부지역 사업으로 인한 피해는 발생가능)
	주민의견			
	투표			
경제	자체평가	• 보상 이외의 지역상생방안 제시 부족	• 이익공유제 등 지역상생방안 마련 • 기금운영위원회를 통한 실질적 주민혜택 증가	• 주민혜택 없음
	주민의견			
	투표			
소통	자체평가	• 소통계획 부재 • 주민간 갈등 악화	• 소통계획 수립 • 원탁회의 개최	• 없음
	주민의견			
	투표			
종합	자체평가	• 사업추진에 주민 반대 심함	• 주민의견 반영하여 계획 보완	
	주민의견			
	투표			

< 시나리오 평가 >		계획 1안 (연명계획)	계획 2안 (주민의견 반영안)	계획 3안 (사업백지화 안)
환경	자체평가	• 환경피해에 대한 주민우려	• 이격거리 증가, 사업기간 조정으로 환경적 우려 감소 •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대응 가능	• 사업으로 인한 환경피해 없음 (외부지역 사업으로 인한 피해는 발생가능)
	주민의견			
	투표			
경제	자체평가	• 보상 이외의 지역상생방안 제시 부족	• 이익공유제 등 지역상생방안 마련 • 기금운영위원회를 통한 실질적 주민혜택 증가	• 주민혜택 없음
	주민의견			
	투표			
소통	자체평가	• 소통계획 부재 • 주민간 갈등 악화	• 소통계획 수립 • 원탁회의 개최	• 없음
	주민의견			
	투표			
종합	자체평가	• 사업추진에 주민 반대 심함	• 주민의견 반영하여 계획 보완	
	주민의견			
	투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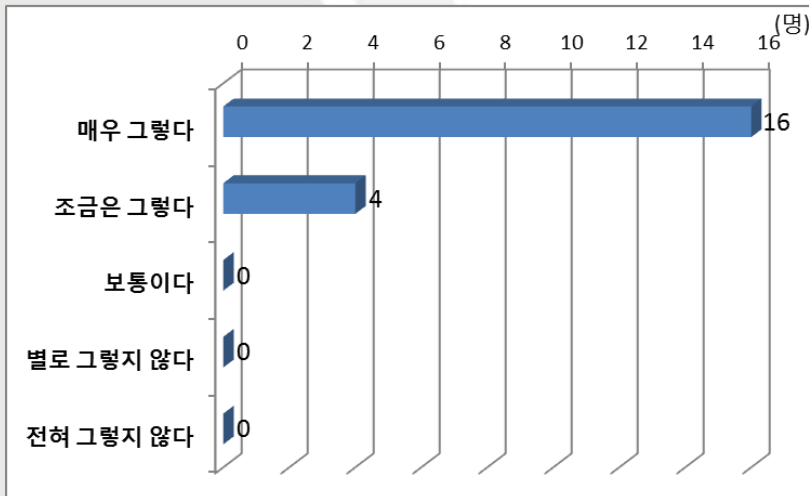
2.2 워크숍 결과(2일차)

2.2.1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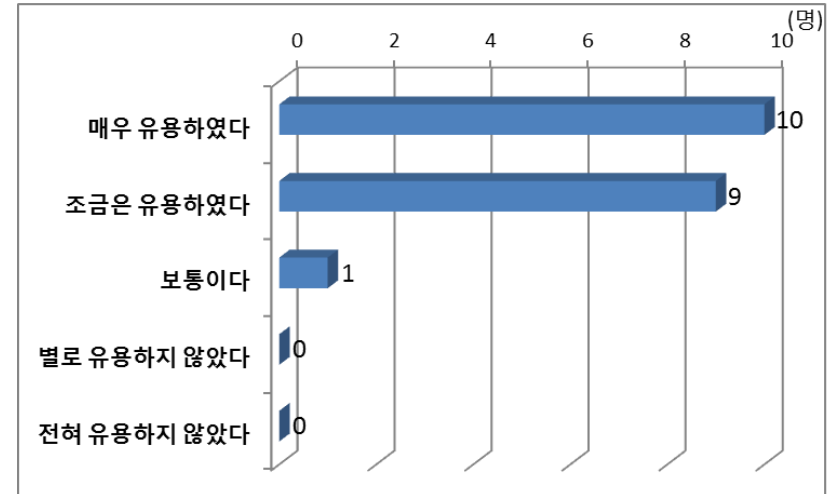
➤ 일시 : 2018.09.19(수) 오전 11시 30분

➤ 응답자 : 총 20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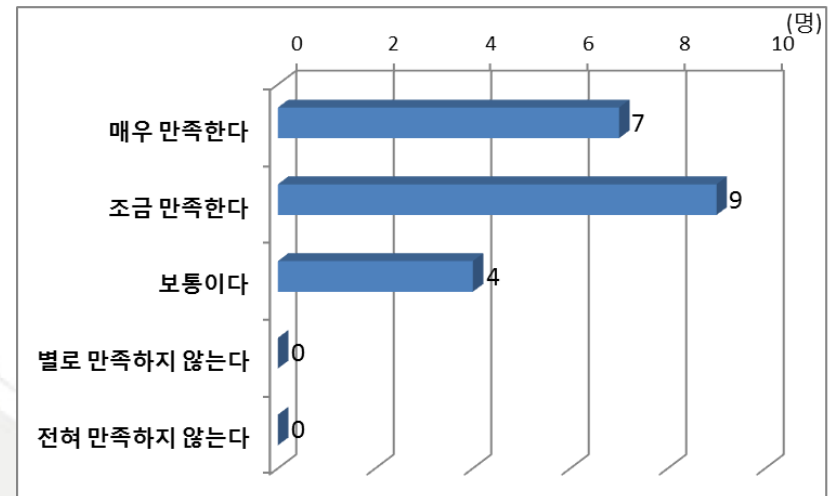
1. 기존의 설명회 방식과 비교하였을 때, 이번 워크숍에서는 귀하의 의견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까?



2. 기존 설명회와는 달리 이번 워크숍은 전체토의와 분과별 토의로 나누어 진행하였습니다. 분과별 토의시간을 가지는 것이 유용하였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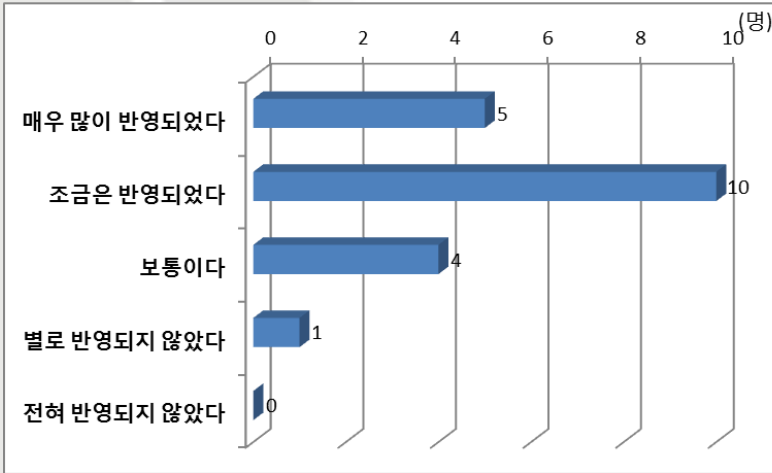


3. 이번 워크숍의 분과토의에서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중립적으로 회의진행, 논점을 명확히 정리)에는 만족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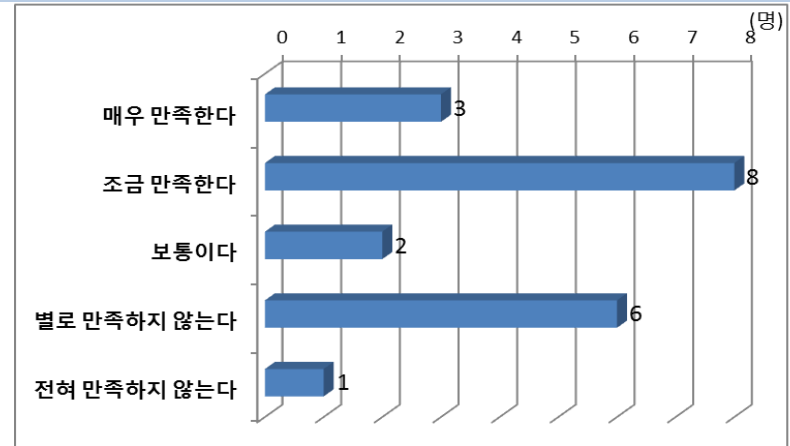


2.2 워크숍 결과(2일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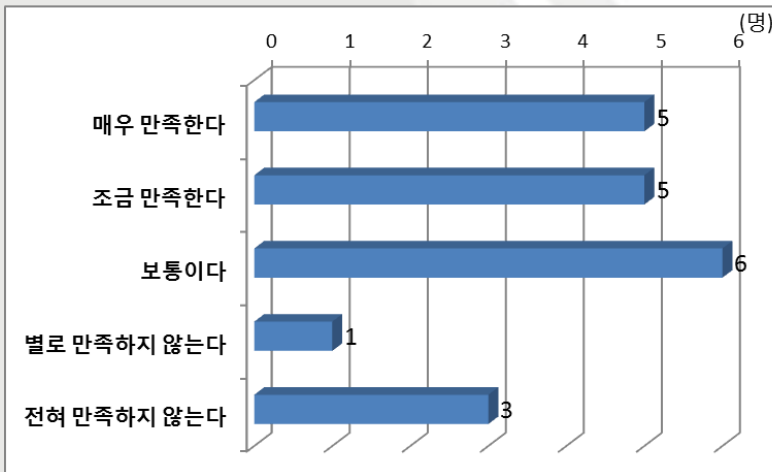
4. 2차 워크숍에서는 1차 워크숍 결과를 반영한 계획대안(계획2안)이 제시되었습니다.
1차워크숍에서 제기된 불만이 충분히 반영되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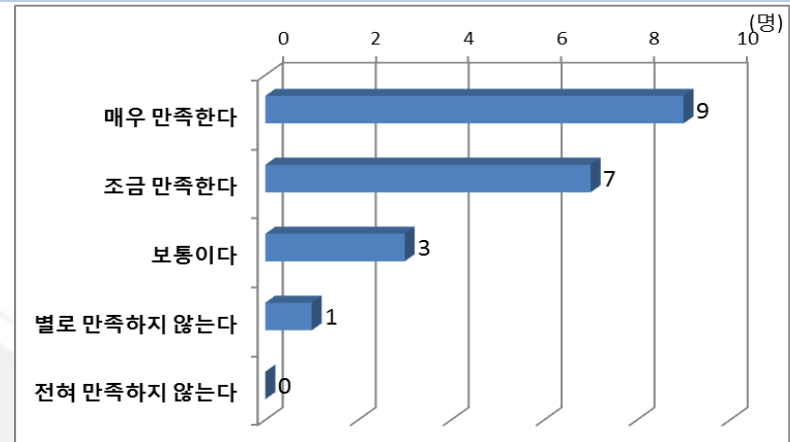
5. 기존 설명회는 하나의 계획안을 설명합니다.
이에 반해 이번 워크숍에서는 하나의 계획안이 아닌 복수의 대안을 검토하였습니다. 복수대안을 비교하는 방식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6. 이번 워크숍에서는 사업을 하지 않는 안(계획 3안)도 포함해서 논의하였습니다. 사업을 하지 않는 안을 검토하는 것에 만족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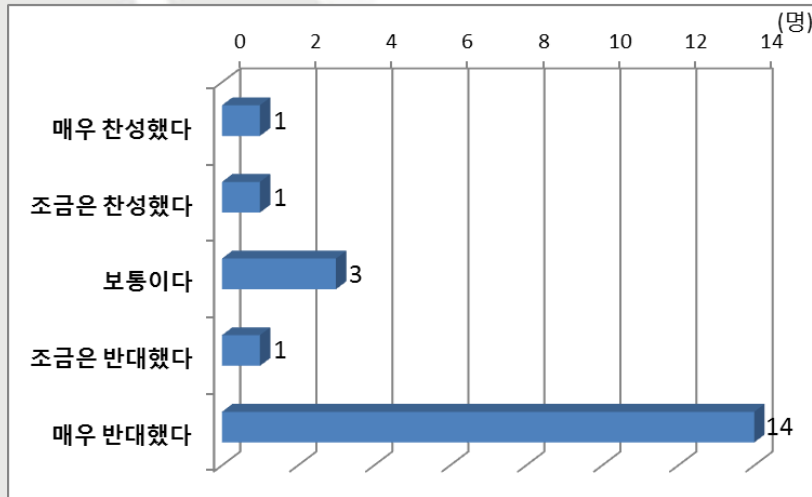


7. 이번 워크숍에서는 지역상생방안이나 소통계획을 만드는 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주민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만족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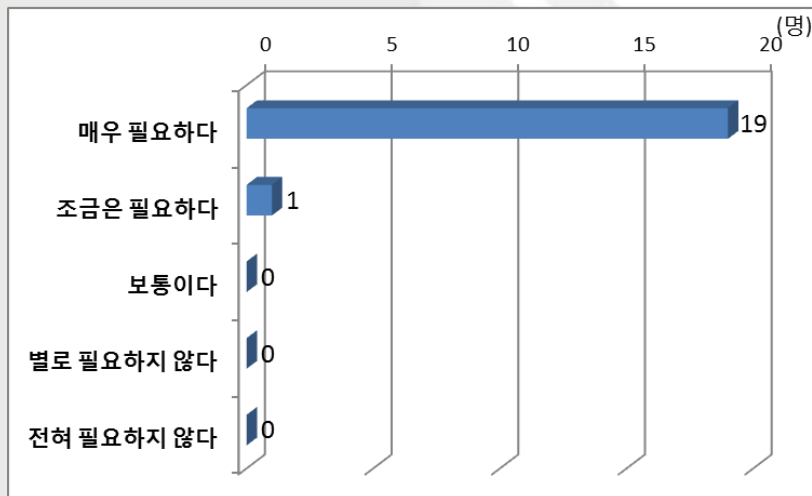


2.2 워크숍 결과(2일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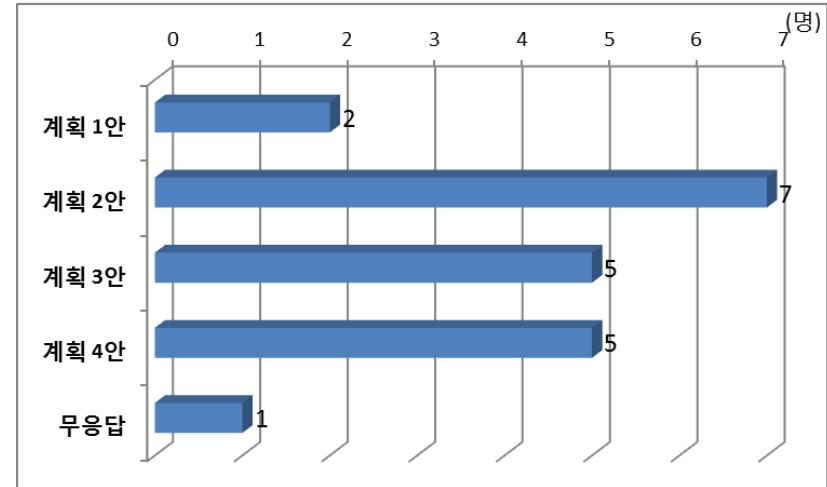
8. (워크숍 개최 전에) 귀하는 고창지역에 해상풍력발전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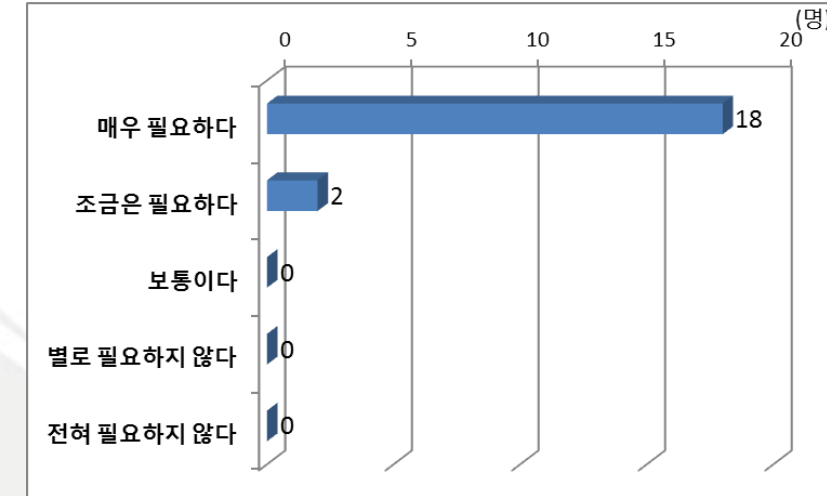
10. 향후 사업의 입지나 규모가 구체화되기 이전에, 즉 계획입지제도 및 공모단계에서 워크숍과 같이 주민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9. (2차 워크숍에서) 귀하는 어떠한 계획대안에 대해서 지지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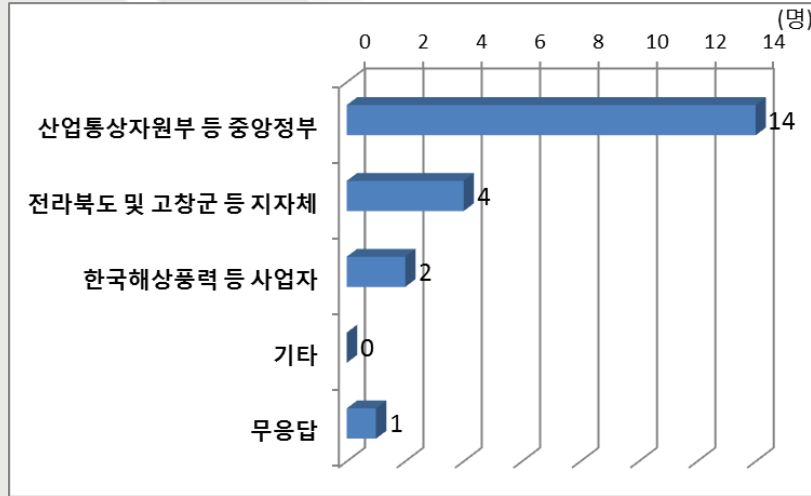


11. 향후 주민참여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듣는 설명회와 달리 주민의견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워크숍을 제도화 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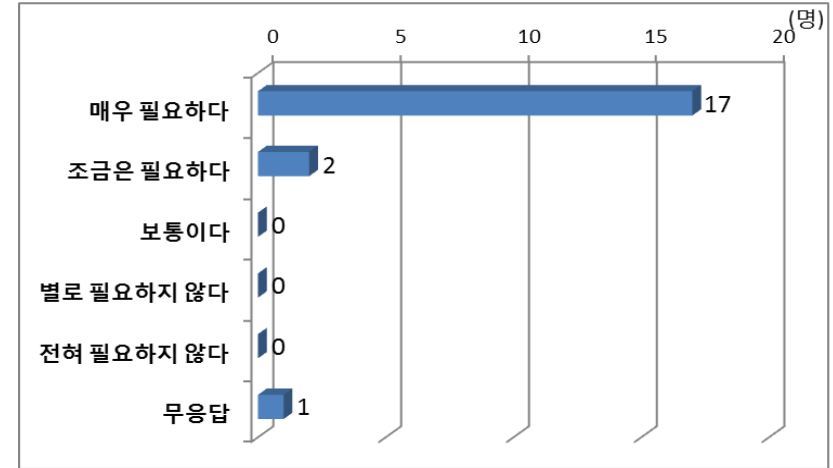


2.2 워크숍 결과(2일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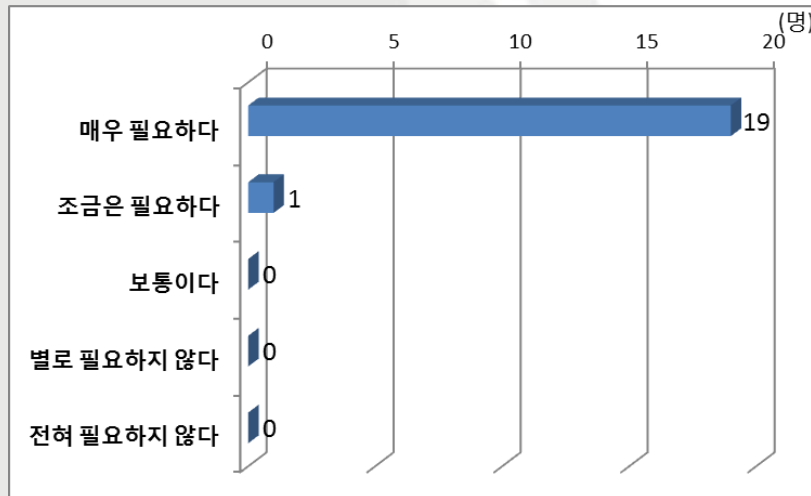
12. 향후 이러한 워크숍을 주최하는 기관은 누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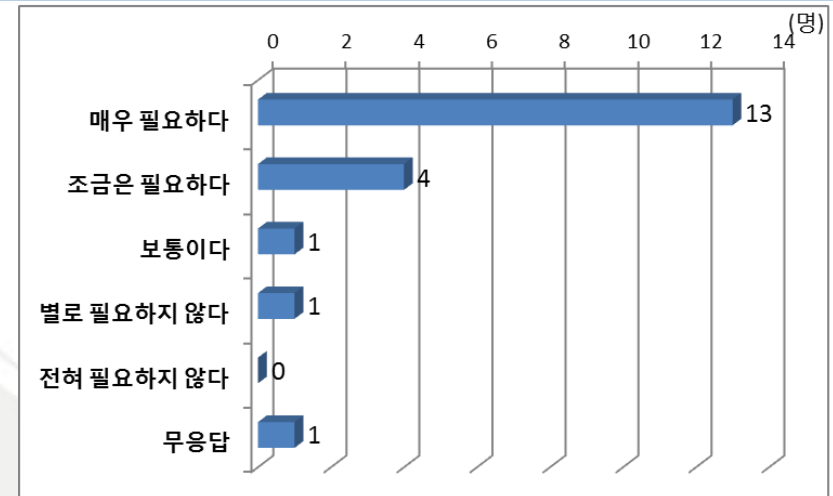
13. 향후 사업계획에는 시설계획만이 아니라 지역상생계획, 소통계획이 필수적으로 포함되도록 제도화 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4. 향후 지역상생방안이나 소통계획을 만드는 과정에 주민참여 기회를 제도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5. 향후 계획입지 단계에서는 복수의 계획대안을 제시하도록 제도화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2 워크숍 결과(2일차)

16. 총 2회의 모의실험에서 느꼈던 좋았던 점과 향후 시나리오 워크숍이 실제로 계획 수립단계에서 적용될 시에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면 자유롭게 작성 부탁드립니다.

좋았던 점	•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었던 점 • 분임토의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발표하고 보다 구체적인 안을 발표할 수 있었다. • 소통에는 조금 만족합니다. 그러나 꼭 풍력이 생겨야 한다면 2안이 조금이나마 나올 것 같고 어선업자로서 실증단지 하날 끝내시고 고창, 영광, 부안 해역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 어민 듣는 소통 • 절차적 민주성(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문제의식은 긍정적임 • 사업 초기 혹은 계획 단계에서부터 주민 참여를 고려하는 것은 긍정적 (계획→실행, 모두 주민 참여)
한계점 및 개선사항	• 어떠한 사업이 계획될 때, 먼저 주민이나 지자체 의견 수렴이 먼저인데 이번 워크숍은 늦은 감이 있다. • 서남해 해상풍력 단지는 백지화를 원하는 것이 우리 어민들입니다. • 서해안 설립 자체로 반대합니다. 본 의견이 꼭 참여되었으면 합니다. • 사업추진을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한 방법으로 쓰일 염려를 느낌 • 모의실험(지역주민 수용성)하는 실제 쟁점 사안을 주제로 하다보니 토론은 활발하게 이루어지나 모의실험의 과정 및 절차에 대한 입장보다 현실 쟁점 사안에 혼동하는 경향이 강함 → 국책사업이라는 포괄적 전제로 실험이 시작되어야 함. 이해의 혼란을 야기하는 것을 시작부터 제거해야 함 • 투표 시, 투표 결과가 왜곡될 수 있음. 포괄적 의미의 국책사업 vs 지역쟁점사안

3.1 긍정적 측면

- 주민들이 그런 자리를 원해왔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분들이 비교적 편하게 의견을 말함
- 향후 국책사업 설계 시 이런 절차가 마련되면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됨
- 주민들의 이해를 돕는 그림과 설명
- 공개적 투표와 개별적 설문 병행
-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음 ex) 전체토론 중 4안에 대한 의견이 나옴.
- 주민들이 강하게 의견을 말했음에도 모의실험에 대한 충분한 설명으로 충돌이 일어나지 않음
- 주민들과의 소통(수용성 증대)이라는 측면에서 가능성을 볼 수 있었음. 스스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대안설정을 스스로 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느낄 수 있었으며 이러한 점을 잘 아우를 경우 성공적인 시나리오 워크숍이 가능하리라 생각됨.
- 주민들이 자신의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말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이전 소통과정의 문제점 파악
- 다양한 쟁점사항에 대한 현재 상황 파악
- 새로운 소통방안 마련에 초석 제공
- 주민들은 사업시행자 혹은 정부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올 것을 요구함
- 주민들이 생각하는 ‘진정성’이란 계획초기단계부터 자신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것뿐 아니라 외국자료를 근거로 문제가 없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할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어업활동을 통해 체득한 자신들의 ‘지역지식’ (local knowledge)에 대한 수용과 인정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임
- 1차 워크숍에 대해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이유 또한 자신들의 의견을 들으려는 연구자들의 ‘진정성’ 있는 태도
- 분임토론 방식은 전체 토론보다 더 많은 사람으로부터 더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효과적인 구조. 뿐만 아니라 소수 사람에 의해 의견이 독점되는 것을 방지함. 예를 들어, 2차 워크숍에서 하전어촌계장에 전체를 상대로 강하게 의견을 개진함에도 불구하고, 각 조에서는 차분하게 자신들의 의견을 말하고 투표 함

3.2 부족한 부분

- 특정 몇몇의 목소리가 커서 일부 주민의 솔직한 의견을 듣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음
- 투표를 실시하기 전에 투표안에 대해서도 사전적으로 검토를 받아야 반감이 줄 것으로 판단됨
- 투표안이 '시나리오'와 '현실'간에 혼동을 가져온 것으로 생각됨
- 계획대안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가 낮았음
- 기술적인 부분과 관련하여, 계획대안이 어민들에게 설득력이 부족했음
- 1차 워크숍 때, 개개인의 의견을 포스트잇에 쓰는 작업이 어려웠음
- 2차 워크숍 때, 조별 투표과정이 혼란스러웠음 ex) 사람은 여섯명인데 한 항목에 20표가 넘게 나와서 재투표함.
- 주민의 참여의식 확대가 소통과 같은 맥락으로 볼때 좀더 대안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가지고(현실적으로는 2차례였지만) 스스로 해결해 가는 과정을 추가하였으면 좀 더 성공적인 워크샵이 될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됨
- 즉, 토크니즘 단계까지 유도할 것인지 혹은 그이상의 것(Risk-sharing, partnership 등)을 바라볼 것인지에 따라 워크샵의 설계가 유동적일 수 있다고 생각됨
- 너무 현실적인 주제 선정으로 주민들이 모의 실험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함
- 워크숍 방향성의 모호함(주민들이 스스로 대안을 만들 수 있게 유도하는 방안)
- 평가단의 다양성 부족(너무 편중된 집단 구성)
- 지역사회 위계구조 이해 부족(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보다는 계장이나 지역사회 지도자 의견에 의존하는 현재 어촌 사회에 대한 이해 부족)
- 대안을 마련 과정에 있어 주민참여 불충분,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정한 틀 내에서 대안을 선택해야 하는가에 대한 강한 불만

3.3 향후 개선방안

- 워크숍의 횟수를 최소 3회 이상으로 하고, 계획안(시나리오) 설정까지도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
- 2차 워크숍 때 어민들도 계획대안을 만들어와서, 우리측의 계획대안과 모아 협의를 하는 방안으로 진행.
- 중간단계의 시간을 좀더 할애하여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던 워크숍으로서 약간의 설계 변경을 통해 좀더 성공적인 실증 케이스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다양한 의견을 끌어낼 수 있는 기법에 대해 고민이 더 필요함(같은 공간내에서, 같은 분과내에서 개인적인 의견이 희석/묵살 될 수 있음)
- 1차 워크숍때의 의견(질문, 의문점 등)에 대해 전문가(믿을 수 있는)와 공부하는 자리, 토론하는 자리가 대안 설정전에 충분히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경제, 환경, 상생이라는 점에서 주민, 사업자, 중립적 전문가의 학습수준, 바라보는 관점 등이 차이가 많이 발생->따라서, 이러한 수준, 특히 학습수준(중립적 입장의)의 평등화/합의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함)
- 다양한 이해당사자 섭외
- 실험에 맞는 주제 및 내용 개발
- 퍼실리테이터 역할에 대한 명확한 설정
- 1차와 2차 모두 참여율이 높은 편임, 즉 주민들의 관심 사항에 경우 워크숍 횟수를 늘리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즉 워크숍의 형식, 횟수들도 주민들과 조율할 필요가 있음
- 즉 워크숍 횟수를 늘려 대안도 함께 찾아가는 방향으로 가면 좋을 듯
- 시나리오 워크숍에 누가 참여자를 할 것인가? 현재처럼 개방적인 구조로 운영할 경우 참여 문턱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 하지만 소수에 의해 논의과정이 왜곡될 가능성도 있음(예를 들어, 과거 대전시에서 지하철과 트랩 건설을 두고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지하철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하여, 의사결정과정이 왜곡 발생)
- (가능하다면)모두 회의과정을 녹음하고 녹취록에 근거해 상세하게 분석한다면, 이 분야의 학문연구 및 정책연구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3.4 자체평가

장점

- 워크숍을 통해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제공
- 상생계획 및 소통계획을 논의한 점
- 쟁점을 명확히 한 점 (카드 브레인 스토밍)
- 대안을 논의할 수 있는 점

한계점

- 대안에 대한 선호도를 공개토론 하려고 한 점
- 모의실험의 한계 (참가자의 대표성과 다양성)
 - * 실험지역의 한계 (고창 vs. 신안)

< 제2차 시나리오 워크숍 그룹 토의 모습 >



< 시나리오 최종 투표 모습 >





IV

정책제언

4.1 제도 개선사항

1. 지자체장은 공모 시 주민의견수렴 의무화

* 획일적인 설명회 보다는 워크숍 같은 쌍방향 교류가 유효

2. 지자체장은 공모전에 타당성 조사 보고서 작성 의무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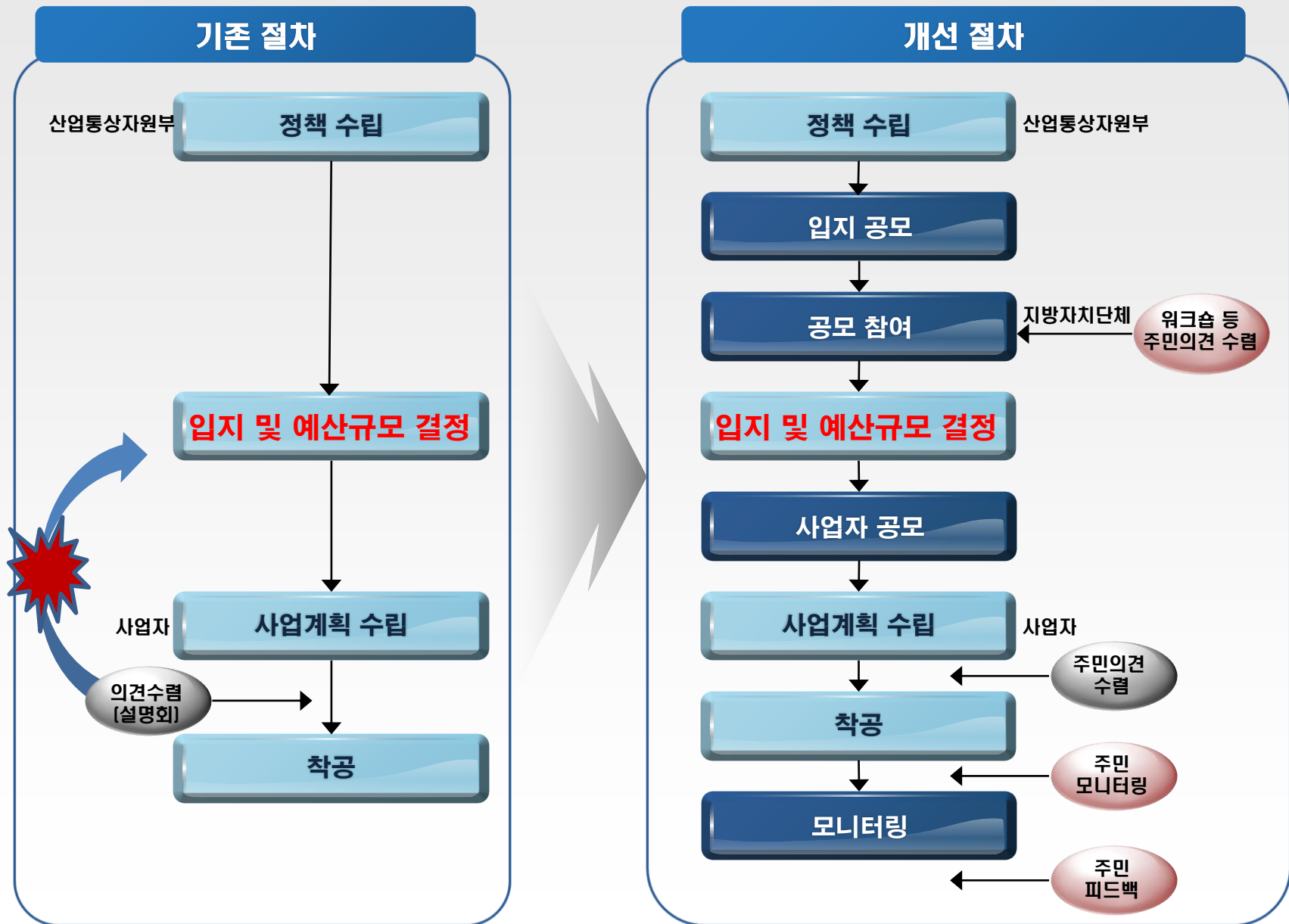
* 환경정보 등의 기초데이터는 중앙정부가 지원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재생에너지발전지구 지정 시에 환경영향, 지역상생계획, 소통계획 및 수용성에 대해서 심사하여야 한다. (심사기준 및 결과 명확히 공개)

* 사업계획은 시설계획, 상생계획, 소통계획을 모두 포함

* 주민-전문가 협의체 구성을 통한 전과정 거버넌스 구축

4.2 계획입지 단계에서 주민의견 수렴 제도화 필요 KEI



❖ 공모참여 여부에 대한 주민수용성 조사 방안

1 안 ; 소규모 워크숍에서 쟁점(대안) 확인 후 주민 설문조사



2 안 ; 대규모 워크숍(공론화)에서 직접 의견수렴



4.3 공모 시에 지자체가 조사해야 할 사항 (공모신청서 첨부자료)

기존 평가 체계

1. 경제성분석

- 수요, 편익, 비용 추정
- 비용편익분석, 민감도 분석

2. 정책적 분석

-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재원조달, 환경성)

3. 지역균형발전

- 지역낙후도, 지역경제 파급효과

개선방안

2. 정책적 분석

2.1 정책일관성

- 1) 관련정책, 수요와의 정합성
- 2) 사업추진과정의 합리성(정보공개, 참여, 투명성 등)

2.2 주민수용도

- 1) 이해관계자 분석
- 2) 설문조사 결과

2.3 리스크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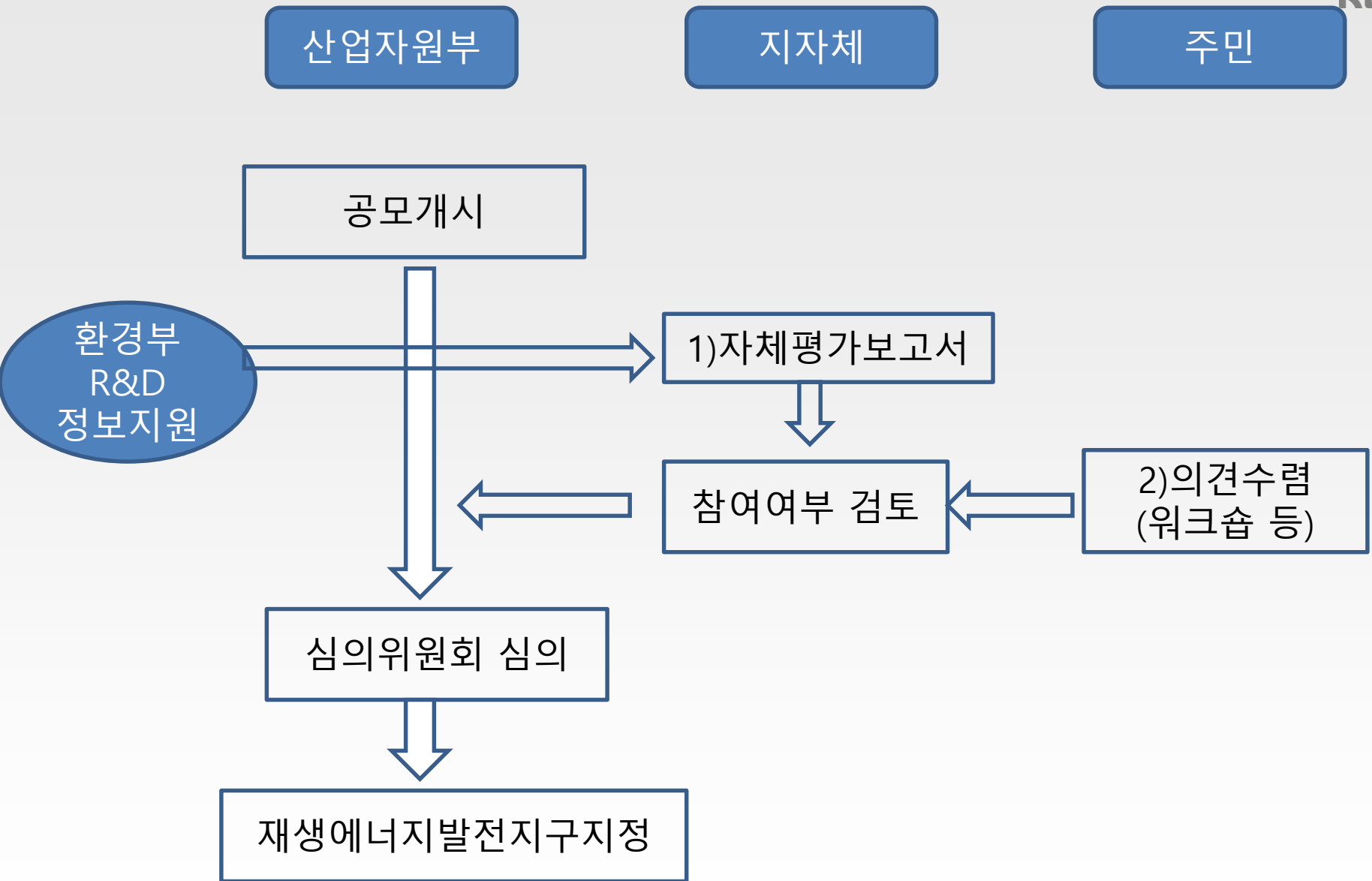
- 1) 환경에 미치는 영향
- 2) 인구, 주거, 생활, 직업 등에 미치는 영향

2.4 형평성

- 1) 개발편익 분배의 형평성
- 2) 리스크(피해)의 형평성

2.5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2.6 갈등관리 메커니즘의 구축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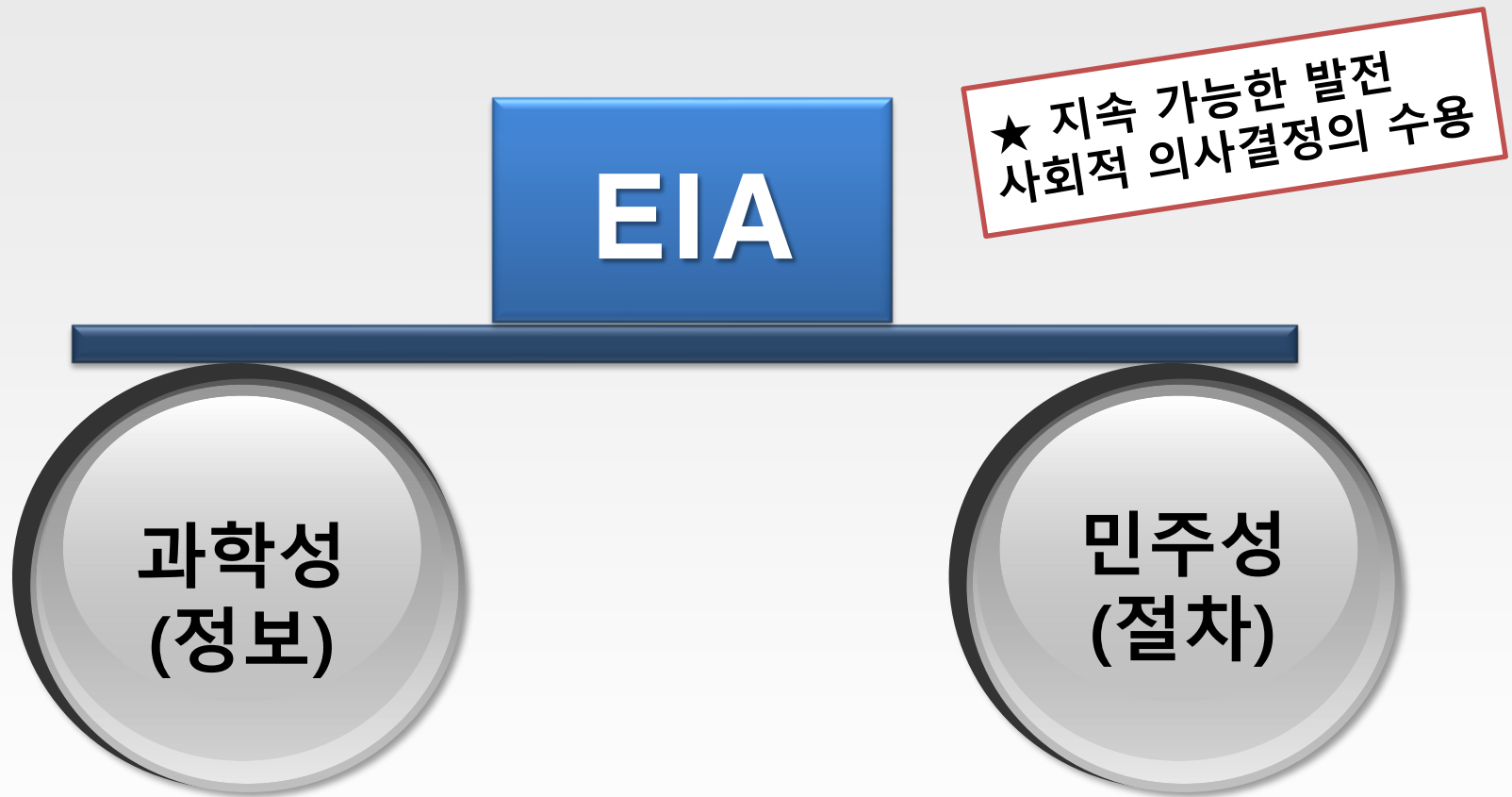
재생에너지발전지구 지정 절차(제안)

사업자가 만든 계획의 수용성 높이는 것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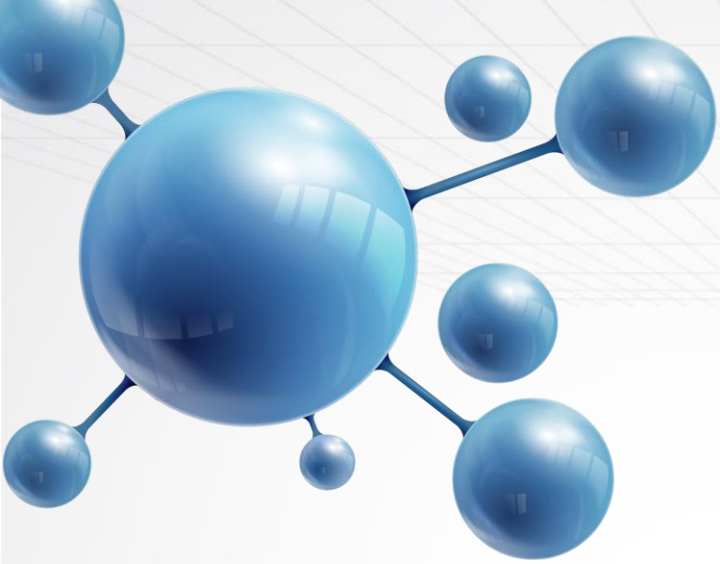


수용성 있는 계획을 함께 만들어 가는 것

환경평가의 요건 = 계획입지제도의 요건



제도 설계의 투명성 확보 !!! (사회적 논의 필요)



THANK YOU

조공장 (kjcho@kei.re.k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 본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MOTIE)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 과제입니다. (No. 20163010024660)